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한국판 뉴딜정책」

인터뷰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

이슈

한국판 뉴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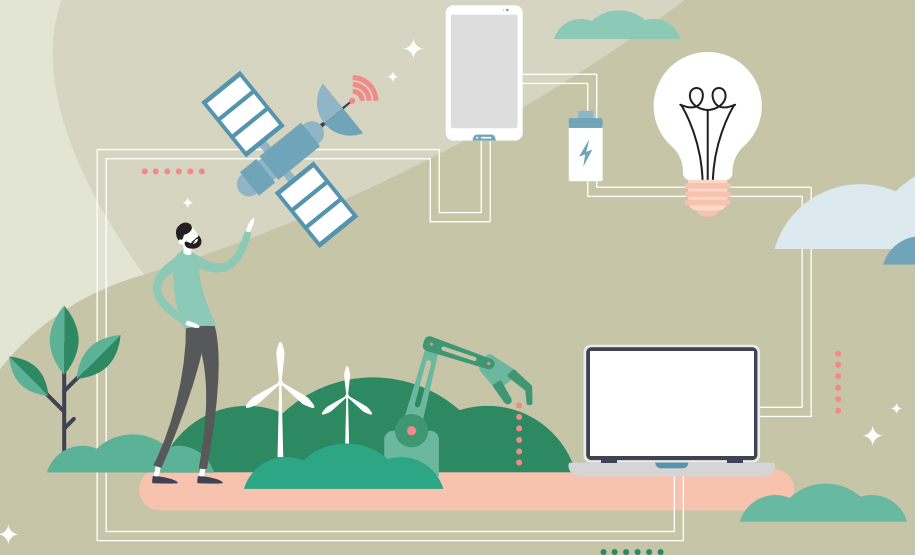
- 공정과 포용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향
- 한국판 그린 뉴딜의 과제
-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
-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 기후위기 대응 못 하는 지자체 그린 뉴딜
- 한국판 뉴딜정책의 배경과 특징

지방의회

-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다
-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다

사례비교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방안



CONTENTS

2020 OCTOBER VOL.33

Cover story



10월호 표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담았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조사·연구하고,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정책개발 추진으로 자치분권 제도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통권 제33호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이상주
편집위원장 최인수
위원 김봉균, 김성주, 김정숙, 김지수, 박승규, 박현욱, 윤성일, 이효, 전대욱, 전성만
간사 탁영지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연락처 전화 033-769-9826 이메일 research@krila.re.kr
홈페이지 www.krila.re.kr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 ※ 지방자치이슈와포럼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기 발행하는 소식지로 지방자치의 다양한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본 지방자치이슈와포럼은 격월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research@krila.re.kr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 견해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04

인터뷰

- 04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
최홍석 現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前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이슈

- 10 한국판 뉴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논단

- 24 공정과 포용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향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32 한국판 그린 뉴딜의 과제
이상현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녹색전환연구소장

- 40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

- 46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유창복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 56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사

- 64 한국판 뉴딜정책의 배경과 특징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70

지방의회

- 70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 76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간다
김안숙 서초구의회 의장

입법동향

- 84 자치경찰 제도의 입법 논의와 쟁점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례비교

- 88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방안
이광춘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겸임교수



104

트렌드 카페

- 102 가치를 거래하는 새로운 소비 N차 신상을 만나다

지방자치단체 탐방

- 104 '무주다운 무주'를 그리다!

KRILA 인포그래픽

- 112 국민참여의 현주소는?

- 114 함께 이뤄내요 협업행정

- 118 연구원 동정

- 123 KRILA 보고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

Interviewee : 최흥석 現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前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Interviewer :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WHO?

최흥석

- 現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前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학력

-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퍼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고려대학교 재료공학 학사

경력

- 2009-2011: 고려대학교 국제처장
- 2010-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 2012-2013: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 2015-201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평가전문위원장
- 2017-2018: 한국행정학회 회장
- 2019-2020: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 1995-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

Q 교수님은 도시행정 및 지방행정을 전공하시면서 한국판 뉴딜 특히 도시재생뉴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은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발굴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충격이 최악의 경제충격과 실업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가져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한국판 뉴딜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구조가 획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및 언택트 환경이 도래하면서 온라인 산업 및 플랫폼 분야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등은 그 충격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zoom 같은 기업들은 매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미국의 아마존이나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문폭주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대비 94%나 줄어들었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위기를 디지털과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의 한국판 뉴딜도 이러한 방

향에서 접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축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방향설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하에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체제에 대한 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 전공분야인 도시재생뉴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뉴딜은 언제 추진되었으며, 한국판 뉴딜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A 도시재생뉴딜이 2017년에 시작되었고, 올해 7월14일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하여, 현재 3개의 뉴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년간 약 50조 원을 전국 500곳에 투자하여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Q 한국판 뉴딜은 말씀하신 대로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성공조건은 무엇일까요?

A 무엇보다 민간부문의 참여와 호응이 필요합니다. 민간부문의 수요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특히 민간부문의 호응과 투자를 이끌어 내어 공공부문 투자 114조 원의 승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이미 도시재생뉴딜이 민간 부문의 호응이 부족한 채, 공공투자만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산업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린 및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 역량을 제고하여, 관련 설비의 일회성 설치 투자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보화의 경우에는 국가사회 정보화기획, 정보통신산업정책, 정보화





수요 창출의 3개축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역시 기획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에서 세부 시행계획과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수요를 창출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U-city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기업과 민간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빠지고, 유지관리는 결국 지자체가 맡았는데,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지속할 수는

없으니,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기반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자의 75%가 지역투자자로 되어있는데,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상향성이 부족하면 사업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도 떨어지게 되므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투자 우선순위 왜곡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의 융합적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2017년 68곳, 18년 99곳, 19년 98곳, 20년 상반기 23곳)은 이미 지정되어 사업 중인 곳도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적절한 곳을 선정하여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수월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시티로 통합화하여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위 따라서는 혁신도시 활성화와의 연결을 도모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 부처, 여러 국과가 관여하는 중앙의 추진체계는 물론이고, 지자체가 사업 설계에도 관여하는 수직적 협업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창생, Society 5.0 등의 사업을 내각부가 주도하여 수직적 및 수평적 정책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판 뉴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I 서론

국제통화기금(IMF)은 9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후퇴가 지난 6월 전망치(-5.2%)보다 0.8%p 상향된 -4.4%로 전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도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수십 년간 기다려 온 인프라 법안 처리를 통해 2조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주요국의 수요가 급감한 상황과 코로나19발 위기가 장기화될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총 34조 위안(한화 약 5,8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동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기존의 그린 뉴딜 정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EU대표부가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있다(김경수, 2020).

〈표 1〉 국가별 포스트 코로나 대응 뉴딜 정책 동향

국가	방향	주요내용
한국	일자리 창출 중심	·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준비 · 기간산업 유지를 위한 세금 투입과 함께 지원받는 기업들에 고용 유지 등 의무 부과 연계
미국	인프라 중심	· 인프라 예산 2조 달러(2,448조 원) 예산법안 제출 - 이동통신망 확대 - 상수도 개선
중국	인프라 중심	· 5세대(5G) 통신 기지국, 도시 간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 시설,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 광저우시: 광저우 형다 축구장 착수(2조 800억 원) - 산둥성: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관련 인프라 (중국의 컴퓨터 밸리를 만드는 뉴딜정책) - 장쑤성: 5G 기지국 52,000곳 건설(2.2조 원) - 국영기업: 전기차 충전설비 78,000개 설치(4,700억 원)
EU	그린 뉴딜 중심	· 에너지전환 산업 육성(자동차, 화석연료 에너지 관련 산업 타격 우려에도 탄소배출 감축을 부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신산업 육성의 지렛대로 활용)

출처: 김경수(2020), 부산형 뉴딜 추진방향과 과제, p.9

우리 경제 역시 이번 사태로 역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저성장과 양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비전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을 마련하였고, 2025년까지 적극적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그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 도출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21.3조 원 규모의 뉴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아울러 뉴딜펀드 조성방안(9월 3일)도 추가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10월 13일)에서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 확정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은 최종 3+1 정책(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성되었다.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판 뉴딜은 선택과 집중 전략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서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가 결정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됨에 따라 현장에 입각한 보다 실효성 있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판 뉴딜'의 이해

1) 한국판 뉴딜의 구조 및 추진방향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7.14일). 이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 정책 목표이다.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을 도모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 발표하였다(10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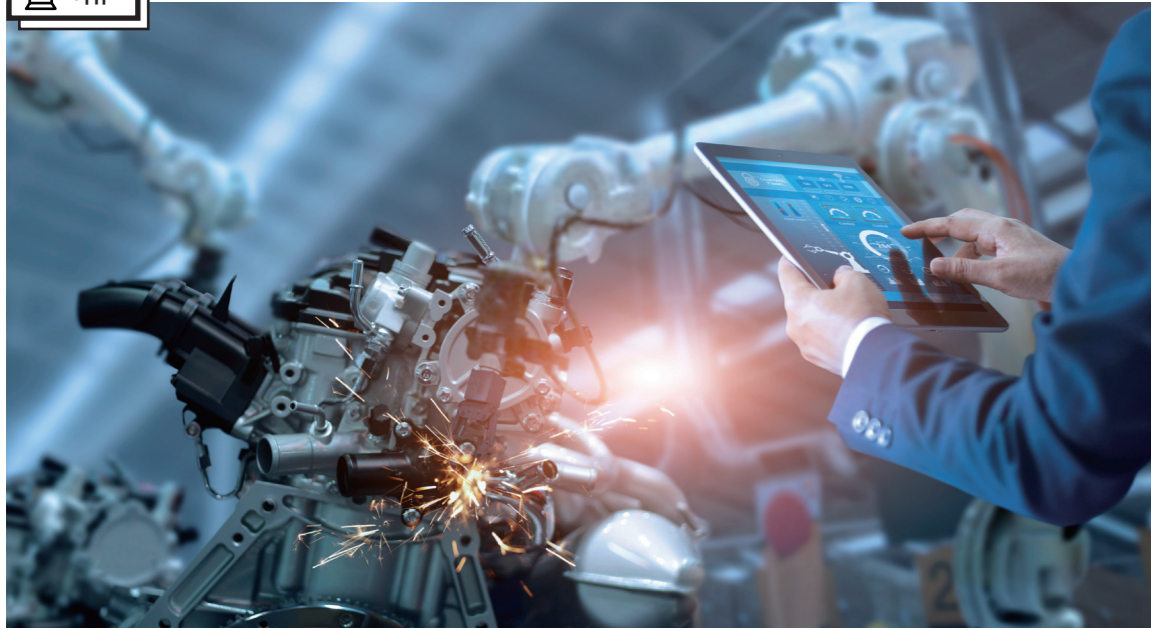
(1) 디지털 뉴딜

우선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림 1〉 한국판 뉴딜의 기본 구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10.13.),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p.8



디지털 뉴딜이란, D.N.A.(Data, Network, AI)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이끄는 '똑똑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에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의 목표이다.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 (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우선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는 공공데이터 개방데이터 구축·AI융합서비스 확산 등으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은 고성능 Wi-Fi 100% 구축, 온라인 교육 강화 등으로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디지털 교육환경을 확충하는 정책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은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는 교통·철도·공항·항만에 디지털 관리체계를 도입,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으로 사회기반시설(SOC)을 디지털화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4가지 정책은 최종적으로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2) 그린 뉴딜

다음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린 뉴딜이란, 저탄소·친환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순 배출이 '0'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지향점으로,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며 그린모빌리티를 확대해 혁신적인 녹색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그린 뉴딜정책은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며,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둘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하는 정책이다. 셋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정책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린 뉴딜과 관련한 정책은 기존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의 낮은 효과성과 그린 뉴딜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로 비판적 시각도 있는 상황이다.

(3) 안전망 강화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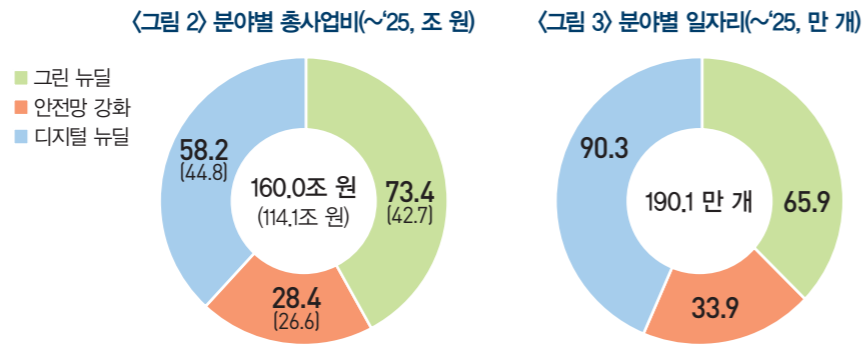
66

그린 뉴딜이란, 저탄소·친환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을 의미 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순 배출이 '0'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지향점으로,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며 그린모빌리티를 확대해 혁신적인 녹색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99

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고용시장,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 사람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 관련한 예산은 2025년 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1만개를 창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에 총사업비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90.3만 개를 창출하고, 그린 뉴딜에 총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 일자리 65.9만 개, 안전망 강화에 총사업비 28.4조 원(국비 26.6조 원), 일자리 33.9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p.8

(4) 지역균형 뉴딜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효과가 귀착되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과 지자체가 자체재원·민간자본 등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디지털 뉴딜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의료여건 개선, 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이 되며, 디지털 뉴딜 총사업비 58.2조

원 중 24.5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에서는 교육인프라 확충(그린스마트 스쿨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보급지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50.8조 원이 지역에 투자되어 한국판 뉴딜 투자규모(160조 원)의 약 47%인 75.3조 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자체가 자체재원과 민자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11개 시도와 125개 지자체가 자체계획을 발표 및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의 지자체 주도형 사업에는 ICT·IoT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관리, AI·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로는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 디지털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체재원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디지털 뉴딜로써 AI 등 신기술 활용,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스마트화 등이 있으며, 그린 뉴딜에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2〉 지역균형 뉴딜 구분 및 개념도

구분	내용	예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 (지방비 매칭사업 등)	·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한국판 뉴딜과 연계, 지자체가 자체재원과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ZEB) 가속화 추진(서울) · 로봇화공장 홀모델 구축(대구)
공공기관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혁신도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10.13.),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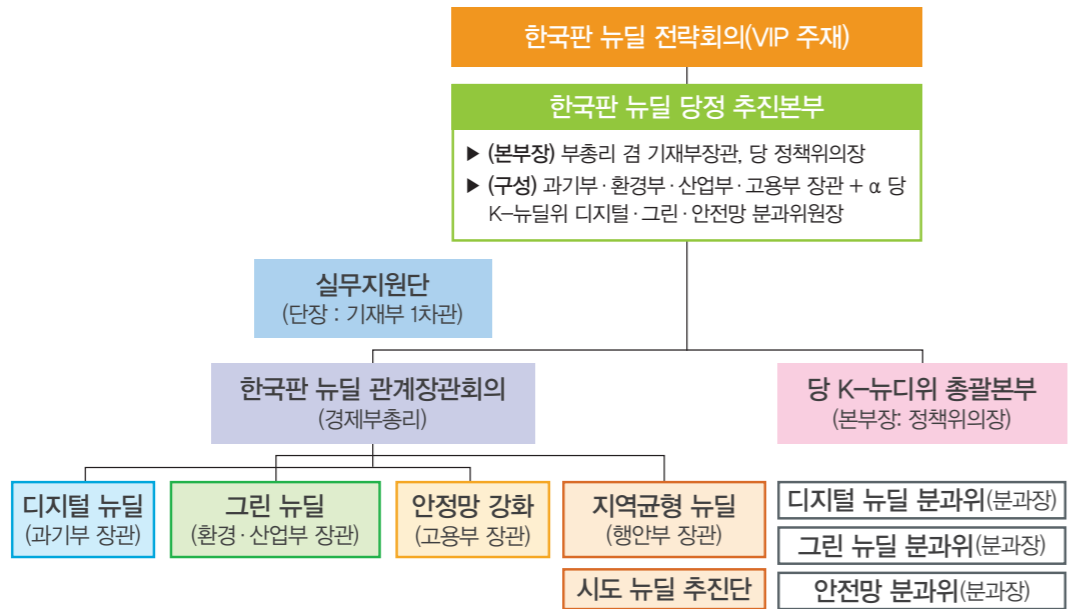
기 위해 주요 산업 및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와 차세대 新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공공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에너지·환경 분야의 그린 뉴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실무집행 및 지원조직 운영 등 협업 강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협업과 집행에 달려있다. 최고 의사결정위원회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하여 주요사안을 결정하고, 산하에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당 K-뉴딜위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구축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중앙과 지역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분과 아래에 각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도 뉴딜 추진단을 설치하여 지역균형 뉴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수행할 전담부서 지정을 권고하고 인력 보강을 위해 '21년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시 이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 5〉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p.8, 관계부처 합동(2020.10.13.),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p.19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한국판 뉴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확장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국가균형발전과 맞물려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의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들이 점차 광역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다양한 행정수요가 전통적 행정단위나 이웃 행정기관과의 협력만으로는 다루기 곤란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가 출현하고 있다(기정훈 외, 2020).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보더라도 예컨대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클러스터와 같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국한해 추진하는 것보다는 초광역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앞으로 발굴될 상당수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초광역 협력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기획하고, 집행·추진하는 지방정부 간에 견고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판 뉴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초광역 협력 사업이나 광역행정상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① 초광역협력 사업은 중앙정부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수직적 거버넌스인 연계(Linking)와,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거버넌스인 협력(Bridging)이 모두 필요한데,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초광역협력사업은 연계는 강한 반면 협력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섭, 2013).
- ② 장밋빛 청사진은 있으나 구체적 정책수단(Action Plan)이 부족하다.
- ③ 이전의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와의 차별성도 약하고, 무엇보다 이전의 프로젝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조직 구성

도시화의 진전과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변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감소는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의 교통수요나 대기오염 등 단일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광역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충분한 문제해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차원에서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행정기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반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상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으며(금창호, 2018), 광역연합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의 광역연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격의 자치단체로 자치조직원이 있고, 자기 재산을 소유하며, 집행기관으로서 관리자,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제정권을 갖는 조합의회로 구성된다. 집행기관으로서 관리자는 둘 이상의 구성 지자체의 장 중에서 선임되며, 조합의 의회의원도 구성 지자체의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역연합은 광역적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권한 이양의 수용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광역계획을 작성하여 연락·조정 사무를 처리한다(금창호, 2018).²⁾

〈표 3〉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성

구분	일반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역	• 고정적/경직적	• 가변적/탄력적
구성원	• 일반주민	• 일반주민/설치기관
자치권	• 포괄적	• 제한적

자료: 금창호(2018)

1)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산림청 등이 해당
 일반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와 같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능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특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2) 광역연합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금창호, 2018, p.190-207)' 참고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광역행정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에 일본 등에서 광역행정·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광역연합제도를 한국판 뉴딜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조직을 구성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광역협력사업은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지자체로 구성되어 정부조직의 위계로 인한 사업의 기획, 집행, 추진에 있어 갈등이나 협업 추진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상존하였고, 참여 지자체별로 예산이 배분되어 그에 따른 중복행정이 발생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협력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표하는 법인격의 자치단체 설립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개정³⁾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 설립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0.10.13.,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 금창호, 2018,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경수, 2020, 부산형 뉴딜 추진방향과 과제, 부산발전포럼.
- 기정훈 외, 202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이원섭, 2013,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3) 현행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고 실질적 내용은 없어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취약하다.

공정과 포용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향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로 인해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를 '대붕쇄(Great Lockdown)'로 명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강도 높은 각국의 봉쇄조치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했고, 우리 경제 역시 항구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감염 초기에 상당히 빠른 대처로 전 세계적인 감염병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받았지만 조용한 지역사회 확산, 재유행 등으로 'with 코로나'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7월,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림 1〉 한국형 뉴딜의 구조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공황과 미국 뉴딜

전후 1920년대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제는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 뉴욕 주식시장의 다우지수가 폭락했다. 주가의 대폭락으로 시작된 경제 불황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당시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1929~1933)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떨어졌고, 1932년이 되자 국민총생산(GNP)이 1929년 GNP의 약 56%까지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급속히 증가해서 1,300만 명에 이르며 파산자가 속출했다. 1932년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빈곤한 1·2차 산업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 독점기업으로 무너지는 중소기업들의 구제와 경제 재건을 위해서 ‘잊혀진 사람들(Forgotten man)을 위한 뉴딜(신정책)’¹⁾을 제안했다.

‘뉴딜(New Deal)’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으로 알려져 있다. 마크 트웨인은 남북전쟁 이후 자유방임 경제로 인해 독점기업만 성장하는 도금시대를 비판하면서 다수인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 스투어드 체이스는 「A New Deal」(1932)에서 자유방임주의로 인한 독점의 병폐가 세계적인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과 새판짜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뉴딜의 기본방향은 3R로 요약할 수 있다(강준형, 2020). 첫째, 대공황에 따른 실업과 빈곤을 구제하는 일(Relief), 둘째, 대공황 이전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Recovery), 셋째, 대공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하는 일(Reform)이다. 뉴딜의 반대말은 ‘올드딜(Old Deal)’이 아니라 ‘정직한 딜(Square Deal)’이다. 정직한 딜은 미국 중산층을 겨냥한 반면, 뉴딜은 취약계층을 겨냥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직한 딜의 핵심가치는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그리고 공정경쟁에 관한 정책들이었으나 뉴딜은 경제회복(Recovery)과 제도개혁(Reform)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민생보호(relief)가 가장 핵심축이었다.²⁾

1) 원래 미국에서 ‘잊혀진 사람들’이란 중산층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를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용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내세웠다.
2) 연합뉴스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차현진의 노미스마] 한국형뉴딜, 차별화해야 성공”.



테네시강 전기뉴딜과 저렴한 공공재 공급

미국의 뉴딜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된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을 주도한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조지 노리스는 지역주민의 생활개선과 기업을 위해서 테네시강 유역 수력발전소 건설을 연방정부가 추진하여 저렴하게 물과 전기를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주 상원에서는 정부가 전기를 공공재로 생산하는 것을 반대하여 민간입찰을 결정했고, 압도적인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포드가 제조업 시장의 독점을 시도하면서 최고 입찰가를 제시, 우선 협상자로 결정되었다. 전기가 민영화되면 대기업의 독점구조가 강화되고 일반 국민들이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노리스는 토지 보상비 혜택 등으로 민영화에 찬성한 주민들을 설득하여 포드의 입찰을 포기시켰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화당원인 노리스의 신념을 수용해서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법을 제정하고, 테네시강에서 생산되는 물과 전기를 공공에 의해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했다.

이후 ‘물과 ‘전기’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자원과 Utility를 공공에서 생산하고, 이를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노리스의 철학은 루즈벨트 뉴딜의 핵심전략이자 성공의 열쇠가 된다. 첫째, 댐 건설단계에서는 대형 건설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둘째, 댐건설 후 수자원 개발단계에서는 댐에서



물 뿐만 아니라 전기가 생산되어 수자원의 가치가 향상되었으며, 셋째, 물과 전기가 공공재로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1차·2차 산업의 생산원가는 크게 낮아졌고, 전문가들의 기술지원이 더해지면서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민간투자가 확대되었으며, 넷째, 전기 이용 확대로 그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이었던 제조업(섬유산업) 등에서의 숙련 노동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흑인과 여성 등의 고용을 창출하여 계층 간 차별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TVA 이후 11년 간 총 16개의 수력발전댐이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전기생산량은 알루미늄 생산량을 늘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최고의 항공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하였다(Long, J., 1999).

한국판 뉴딜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기 뉴노멀 하에서 국가비전과 한국판 뉴딜의 목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변신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사회경제 개조 로드맵이면서, 계층에 상관 없이 국민과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취약계층은 국가가 포용하는 사회, 즉 '공정'과 '포용'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물리적으로 완성하는 사업이다(김현명, 2020).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1936년 대통령에

재당선된 루즈벨트는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라며 뉴딜의 추진 방향성을 분명히 밝혔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국판 뉴딜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과정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토론과 설득이 필요하며,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 뉴딜이라는 용어는 과거 정부에서도 사용되던 말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정보통신 뉴딜’, 노무현 정부 때는 ‘종합투자 뉴딜’,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뉴딜’, 박근혜 정부 시절엔 ‘스마트 뉴딜’이라는 말이 있었다(강준형, 2020). 분명한 목표 설정과 정책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국판 데이터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궁극적인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다.

〈그림 2〉 한국판 뉴딜의 3대 사업



자료: 김현명(2020), “한국형 뉴딜의 이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한국사회 새판짜기”, 명지대학교.

단기적으로 비대면 환경에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DNA(Data, Network, AI) 산업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제성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김현명, 2020). 과거 미국의 뉴딜이 테네시강에서 댐을 건설하여 '물'만 공급했다면 효과를 창출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댐에서 물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공공재로싼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당시로서는 첨단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을 부흥시켰고, 이를 통해서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했다. 지금은 경제위기극복에 있어서 4차 산업이 Key가 되어야 한다. DNA(Data, Network, AI)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데이터를 파생상품으로 많이 만들어야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이 없어도 기술만으로도 매출이 창출되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에 의한 고용이 창출되려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테네시강에서 물과 전기를 '공공재'로서 공급했듯 DNA 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자원은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공공재'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댐'에서 구축되는 자원들은 최대한 공공재로서 국민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게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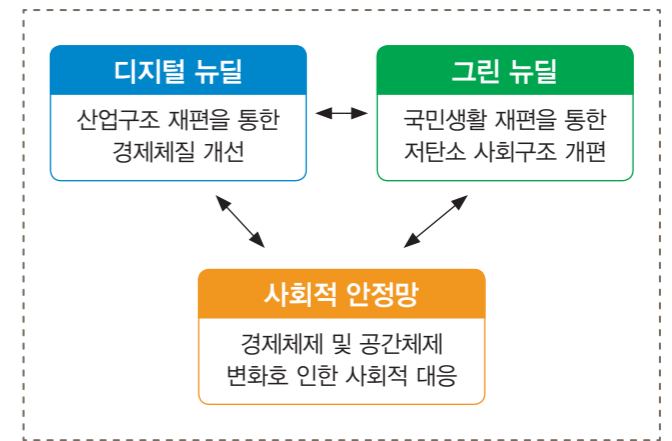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물리적 거리를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도록 인구와 인프라 공급을 분산시키고 국토 공간을 재편하는 동시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녹색기술의 확보와 보급이 필요하다. 녹색 인프라 기술을 통해서 분산되어 살더라도 불편하지 않는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소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국민생활 재편을 통한 사회구조 재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은 고용 안전망 사업을 통해서 대응해 나간다.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로 인한 경제체제와 공간체제 변화는 일시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므로 이러한 불안요소는 국가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강조했듯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회적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및 일자리 충격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으며, 중소기업 및 전통 서비스업 등은 주로 지역에 입지해 있어 디지털 기반이 더욱 취약하다. 지역기업에서도 사업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고 업종 등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유도·지원하여 '지역뉴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3〉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중소 제조업체 및 전통 서비스업 등은 주로 지역에 입지해 있어 디지털 기반이 더욱 취약하다. 지역기업에서도 사업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고 업종 등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유도·지원하여 '지역뉴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준형(2020), "대공황과 뉴딜, 한국판 뉴딜의 시사점", 「SPRI FOCUS」,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관계부처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 -」.
- 김현명(2020), "한국형 뉴딜의 이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한국사회 새판짜기", 명지대학교.
- Long, J.(1999), "Government Job Creation Programs: Lessons from the 1930s and 1940s", Journal of Economic Issues, 33(4).

한국판 그린 뉴딜의 과제



이상현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녹색전환연구소장



1. 들어가며

기후변화는 이제 과학적 논쟁을 벗어나서 체감할 수 있는 위기로 다가왔다. 시베리아의 여름 온도가 38℃까지 올랐고, 영구동토층에서는 산불이 계속 되어 땅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하면서 깊이 30m, 폭 20m가 넘는 싱크홀이 여기저기 발생하였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호주에서는 6개월간 산불이 지속되었으며,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곤, 워싱턴주에서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열대 습지이며 생태계의 보물 창고로 불리는 브라질 판타나우에는 이상 가뭄이 계속되어 올해 들어서만 7천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고, 재규어를 비롯한 희귀종들이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 한반도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 되었고, 54일간이라는 사상 최장의 장마가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화석연료 의존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일변도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우리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과 산업구조의 재편, 삶의 방식 전환을 위한 노력은 미국과 유럽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해야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2020년 세계기상기구(IMO)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5년 안에 1.5℃를 넘을 확률이 20%이고 시간이 갈수록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 코린 르 퀘레 교수의 공동연구팀은 2020년 학술지 Nature Climate Change에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배출량은 약 10% 감소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며, 매년 약 1%씩 증가하고 있는 최근 추세와 비교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 농도는 작년보다 오히려 약 3ppm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배출되어 수 백년 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잠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농도 감소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조천호, 2020).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비관적인 전망은 7년) 남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손을 쓴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화석연료 의존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일변도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우리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과 산업구조의 재편, 삶의 방식 전환을 위한 노력은 미국과 유럽에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당시는 주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그쳤다. 본격적인 그린 뉴딜정책은 2019년 2월 7일 하원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민주당 의원과 상원의 에드 마키 민주당 의원 주도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한 상하원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모든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무(無)배출 달성, 둘째, 수백만의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경제안보와 번영 보장, 셋째, 21세기의 도전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산업에 투자, 넷째, 미국의 모든 세대에 대해 깨끗한 물과 공기, 기후와 공동체 회복탄력성, 건강한 음식, 자연에의 접근성,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다섯째, 원주민, 유색인종 및 이민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 금지를 통한 정의 및 공정성 구축(국회사무처, 2019)이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해왔던 유럽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담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EU 그린 딜(Green Deal)이라고 이름 붙였다. 에너지 효율성 증대,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 자원 재활용률 증가를 통한 자원순환 경제의 정착, '정의로운 전환 메카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실업 등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방안), 수송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포함해서 2050년까지 배출량의 90% 줄이기, 건물 고효율 단열재와 같은 친환경 건축물용 자재 산업 육성 및 친환경 인증 제도 정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From Farm to Fork)의 구축 등이 유럽 그린 딜의 핵심 내용들이다. 유럽 의회는 그린딜 예산으로 1조 유로(한화로 약 1천4백 조원)를 책정하였다(European Commission).

II. 한국판 그린 뉴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녹색당 등에서 (강조점과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린 뉴딜 관련 공약이 제출된 바가 있었다. 2020년 5월 7일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혁신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크게 3대 과제가 포함되었는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위

기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대응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했고,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7월 14일에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림 1〉 한국형 뉴딜의 구조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다시 환기되었으며,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셋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 등장하는 계기도 되지만, 동시에 일자리 불일치(mismatch),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직과 실직, 실업, 양극화 문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가지고 10개의 대표과제를 비롯해 총 28개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합동, 2020).

III. 한국판 그린뉴딜의 한계들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린 뉴딜이 제안된 가장 큰 배경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재 제시된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상당히 실망스럽다.

첫째,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린 뉴딜에서 빠져있다. 물론 탄소중립을 지향한다는 표현은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2014년에 잠깐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본 적이 없다. 2017년 현재 한국은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BAU), 2030년에는 8억 5천만 톤을 배출할 예정이다. 한국의 공식목표는 BAU 대비 35%를 감축해서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인데, 이 경우 한국의 경제수준은 2005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 2020년 2월 5일,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위원장 조홍식, 이하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이하 검토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약 9개월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ED'S 포럼에서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 대비 75%를 감축하는 1안부터 40%를 감축하는 5안까지 5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1990년 대비 75%를 감축하고, 일본은 2013년 대비 80% 감축하는 안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선진국들은 1990년 이래 지속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덕분에 2050년까지 감축 경로가 비교적 완만하지만 한국은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줄이지 못해 1, 2안을 택하게 되면 감축 경로가 급격해진다. 즉, 매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파리협정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면 우리 경제는 1992년 수준(약 3억 4천만톤)으로 돌아가야 한다(김병권, 2020: 71-72). 이게 가능할까? 그나마 현재 그린뉴딜에는 아무런 목표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정책 수단으로 달성할 지도 알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약당국가의 오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그린 뉴딜정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 현재 한국판 그린 뉴딜에 포함된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은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 공고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지역 보호’,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 에너지 전환이 매우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의 핵심적인 배출원인 석탄발전 전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현재 한국판 그린 뉴딜에 포함된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 공고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지역 보호」,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부합동, 2020). 먼저, 수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2018년)에 따른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3,410만톤) 분은 금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계획) 초안(2020년)에 반영되었다. 9차 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 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지하고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9차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 수명 30년 후 순차 폐지안을 따를 경우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가 3.2배 초과 배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이지언, 2020). 더군다나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이 전력원에서 최대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환경급전 원칙이 퇴색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해외로 석탄발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분산형 전력 시스템은 송배전선망의 분산화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의 경우 한국전력의 독점구조를 어떻게 할지, 분산의 지역적 단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이행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물론 이 문제가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 어렵겠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망이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농업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었다. 기후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농업 분야에서 일어난다. 장마, 가뭄, 태풍, 이상고온이나 이상저온 등 기상이변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다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어져 있는 식량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2007~2008년에 이상 기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식량수출국이 수출을 규제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미국은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약 4조 달러), 시중에 풀린 자금이 식량시장에 투자되는 바람에 밀 가격은 100%, 옥수수 가격은 70%, 쌀 가격은 30%가 올랐다. 그 결과 38개국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배고픔은 사회 불안으로 변했으며, 이집트를 비롯한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봉기가 발생하였다. 올해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양적완화로 이미 6조 달러를 공급했고, 유럽과 일본도 양적완화를 한다면 거품 자본은 약 10조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만약 이 돈이 또다시 식량시장에 유입된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지도 모른다(하승수, 2020; 원테진, 2020). 특히 한국처럼 먹을거리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6.7%에 불과하며, 가축이 먹는 사료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7%에 그친다. 문제는 자급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승수, 2020).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한국판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디지털과 에너지 위주의 계획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후위기의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부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 계획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IV. 맺으며

그린 뉴딜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했던 저탄소 녹색성장과는 달라야 한다.

“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고 혁신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농업과 먹거리 확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안적 발전 방식에 대한 담론이 만들어져야 한다. 대기업 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고려해보면, 정부 재정을 확대해서 결국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반드시 필요하다(이상현, 2020).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농업과 먹거리 확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만이 아니라 심각하게 양극화된 사회구조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과감한 대책들이 제안되고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요컨대, 한국판 뉴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급진적인 모습을 갖춰야 한다. 기후 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이상현, 2020. “한국 사회 녹색전환 전략의 필요성”. 환경부 엮음. 『녹색전환-지속가능한 생태 사회를 위한 가치와 전략』. 한울아카데미
- 이지연, 2020.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탈석탄관련 이슈와 쟁점”, 《2020 탈석탄 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 국회사무처, 2019. “미 의회의 그린뉴딜 정책 논의 현황” (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3.do?mode=view&articleNo=660735)
- 원테진(溫鐵軍), 2020. “내년 안에 식량위기...글로벌라이제이션이 새 트렌드 될 것” 《경향신문》 2020. 6.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10600025)
- 조천호, 2020. “코로나19 위기 중에도 기후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 2020.5.27.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46637.html)
- 하승수, 2020. “정부 식량위기 핵심 대책이 ‘해외 곡물 반입명령’?” 《한겨레》 2020.9.2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4397>)
-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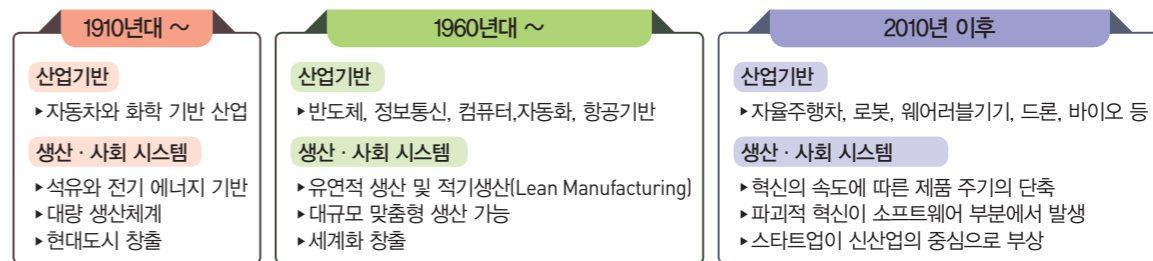
I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의 대전환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큰 충격을 안겨준 진행형의 사건이다. 최근 아메리카대륙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2차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방식의 업태 및 소비양식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의 공간적 축소와 권역화, 계층 간 소득격차의 확대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기 보다는 기술의 변화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장기적인 추세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슈퍼 사이클의 변화는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호 연결성의 확대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비즈니스와 혁신의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산업의 메가트렌드에는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리더를 창출하는 50년 주기의 거대한 전환(super cycle)이 존재한다고 한다(Kautzsch et al., 2018). 1910년대에는 석유와 전기 에너지에 기반하고, 자동차와 화학 같은 장치형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대량생산체계가 형성되고 현대도시가 창출되었다. 50년 후인 1960년대에는 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 자동차, 항공 등이 기반산업을 형성하고, 유연적 생산과 적기생산(Lean manufacturing) 방식을 통해 대규모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세계화가 창출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혁신의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제품주기가 단축되고, 파괴적 혁신이 소프트웨어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승자독식 시장이 확대되었고, 대규모 제조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자금조달(금융)보다 적절한 인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스타트업이 신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1〉 경제·산업의 대전환 역사



자료: Kautzsch et al.(2018)에 기초하여 재구성

이러한 슈퍼 사이클의 변화는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호 연결성의 확대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비즈니스와 혁신의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집적회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여 디지털화와 상호 연결성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2007년 이후 스마트폰 사용 확대에 따라 모바일 연결성이 결합되면서 광범위한 신제품과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등장하여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주도한 것이다.

최근의 디지털 기술생태계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하둡(Hadoop)과 같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로봇 공학, 그리드 및 신경기반 컴퓨팅, 가상 현실 등의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다(OECD, 2018). 디지털 기술생태계는 사회 경제 분야의 빠르고 광범위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며, 그 결과 아날로그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장과 경제활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변화의 귀결은 데이터경제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경제(Data Economy)는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 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부상한 것에 기반한다. 1차 산업혁명이 석탄과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이 석유와 전기, 3차 산업혁명이 전자와 IT시스템을 핵심 동력원으로 삼고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라는 자원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데이터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구분이 없어진다. 소비자가 곧 데이터의 생산자이고, 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혁신은 새로운 제품·생산공정·조직구성·시장을 창출하고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하는 것(OECD, 2015)이다.

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이와 연계된 데이터경제 시대로의 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화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화상회의, 재택근무, 원격의료 등은 산업의 생산방식과 일하는 방식, 소비패턴의 변화 등 경제전반의 대전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 산업 대전환의 과정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가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II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주요내용

디지털 뉴딜이란 최근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의 HW 인프라는 발달했지만, 제도적 제약, SW 전문 인력의 부족, 취약한 데이터 인프라 등 여러 한계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자 한 의욕적인 전략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D·N·A(Data·Network·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다.

디지털 뉴딜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DNA 생태계 강화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1·2·3차 산업 5G·AI 융합 확산,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등을 추진한다. 둘째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으로서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는 비대면 산업 육성인데, 이를 위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을 추진한다. 넷째는 SOC 디지털화로서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 대응 분야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와 스마트산단의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의 추진과제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가고 있는 경제·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경제의 주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뉴딜사업은 우리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경제 경쟁력 강

“ 뉴딜사업은 우리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민관협력을 통한 세부적인 전략과 보완대책, 규제개혁을 포함한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민관협력을 통한 세부적인 전략과 보완대책, 규제개혁을 포함한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III 디지털 뉴딜정책의 보완 방향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이들 사업을 보면, 부분별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조업 전반을 디지털 대전환으로 끌고 갈 전략적 방안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SOC, 비대면 산업에 대한 디지털 화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한 제조업 분야의 성장 전략 역시 부재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기반으로 한국 제조업의 장점을 살려 산업·기업 유형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제조기업들의 지능화와 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스마트제조 시스템의 확산을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역량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과 도입 역량이다.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에도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지원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지원과 같은 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대책도 검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초보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심도있는 실태 파악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로 설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특화분야와 관련된 공공연구기관들이 중소기업의 다양한 스마트 제조 유형 및 적용형태에 대한 연구 및 보급·확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 제조를 통해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및 투자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는 디지털 기술인력을 대폭 양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인력을 통해 기존 제조·생산 기술에

“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기반으로 한국 제조업의 장점을 살려 산업·기업 유형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제조기업들의 지능화와 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스마트제조 시스템의 확산을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표 1> 한국형 뉴딜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주요 내용

과제	주요 투자사업	분야	주요 내용
데이터 구축·개발·활용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조·산업	• 수요공급 예측, 공장 최적화를 위한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 • 중소기업에 AI 전문인력 네트워크 지원 •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신소재 탐색, 소재 설계 등에 활용
			데이터 거래에 주력산업, 혁신성장 동력분야, 유망 서비스업 등 고려하여 30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구축
1,2,3차 산업으로 5G, AI 융합 확산	5G기반 융합 서비스 확산	자율차, 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검증, 실증 추진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1,2만개 보급(~22) • 로봇 설비 구축 300개사 지원, 제조 스마트화 도입 자금, 보증 5조원 공급
	로봇	• 첨단제조로봇 12종 실증장비 구축 • 제조·서비스분야 수요 맞춤형 AI 로봇 개발·보급 확산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및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육성	비대면 제품·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분야 중소기업에 우대보증
		혁신기술 개발	6G 통신, 차세대 AI,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 지원
	AI바우처	AI 기술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 개발 바우처 제공	
	디지털 전환	주력산업 제조현장 디지털화 지원(데이터·AI 기반 공동 R&D 및 산업용 지능융합부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술 개발 추진)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0. 7)

디지털기술을 덧입혀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적용성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경제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정비하고, 데이터 기술인력을 대폭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기술인력(예: AI, 빅데이터 전문가)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비즈니스의 확산과 연계한 기업 내 교육훈련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직무전환·재배치, 근로시간단축·교대제 개편 등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2018. 12.
- 김석관 외, 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정책연구 2017-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은미 외(2019), 「한국형 스마트 제조전략」, 산업연구원.
- 최영섭 외(2017), 인력양성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대응(20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데이터진흥원(2018), 「2017년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 OECD(2018), The 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 OECD
- OECD(2015), Data driven Innovation: Big Data for Growth and Well-being, OECD.
- Pisano, G. P. and Shih W. C.(2012), Producing Prosperity : Why America Needs a Manufacturing Renaissance, (고영훈 옮김, 왜 제조업 르네상스인가?, 지식노마드) Boston, MA: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2012.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I 언택트에서 로컬택트로



유창복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코로나19는 이제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비대면(언택트)의 일상은 더욱 강제될 전망이다.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재난 상태가 일상화된다면, 비대면으로 우리의 일상을 버틸 수 있을까? 더욱이 비대면으로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비대면을 마냥 지속하기란 더욱 버겁다. 비대면을 유지하자니 일상이 무너지고, 비대면을 포기하자니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가 없다. 딜레마 상황이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면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거리 이동이 위험하다면 '근거리 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럿이 함께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면 '분산'해서 소규모로 만나야 한다. 익명성이 방역의 위험요소라면 신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면적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즉, 근거리 범위 안에서 신뢰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분산해서 만나며 살아 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마을이고 동네다. 그래서 이제는 로컬(Local)이다.

적절한 거리두기와 대면적 일상의 영위가 가능한 '신뢰 기반의 로컬 관계망'이 생활방역이자 생활안전망이다. '근거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분산'되고, 상호 '신뢰'가 있는 로컬을 중심으로 일상이 재편되고, 노동과 서비스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With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 비대면'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로컬 관계망'이다. 이제 언택트(Un-tact)에서 로컬택트(Local-tact)로 전환해야 한다.

“ With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 비대면'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로컬 관계망'이다. 이제 언택트에서 로컬택트로 전환해야 한다.

II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기후 온난화로 코로나19보다 훨씬 치명적인 기후 재난시대가 도래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이 빠르게 강구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그린뉴딜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정치권도 신속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1. 탄소중립화와 백캐스팅(Backcasting)

그린뉴딜의 목표는 무엇보다 탄소중립화, 즉 30년 안에 탄소배출을 제로(Net Zero)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10년 안에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어 올해 8%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탄소배출 50% 절감의 목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이 최소한 7~8번 와야 비로소 달성 가능한 목표인 셈이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경제성장률 -5.1%) 약 14%의 탄소배출을 감축했다니, 10년 동안 외환위기를 다섯 번 연거푸 겪어야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만큼'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 확고한 절감의 목표를 정하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무조건 달성해내는 백캐스팅(backcasting)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짜야한다. 30년 내에 탄소제로

(Net Zero), 10년 내 50% 축소를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저탄소 사회' 또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애매한 목표를 설정한 채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나열해서는 결코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그린 워싱(Green Washing)은 오히려 기후위기의 위험과 절박함을 흐리고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

2. 탄소기득권과 불평등체제

지금은 불평등이 극에 달했던 1929년 미국 대공황 시기 이래 100년만의 최악의 불평등 상황이다. 불평등과 탄소기득권은 탄소(석탄과 석유) 기반의 산업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 탄소배출을 줄이라는 것은 탄소 기반의 산업체제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기존의 기득권 체제를 흔드는 일이다. 한 예로 10년 내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석유자원의 사용을 급격히 중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석유채굴 설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른바 천문학적인 규모의 '좌초자산'이 발생한다.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제시한 시나리오에서 석유산업의 원유생산 부문만을 보면,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현재의 자본지출 수준을 2030년 까지 유지할 경우, 화석연료 좌초자산은 약 총 7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쉽게 예상된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린뉴딜은 단순히 환경의 가치만을 주창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불평등의 체제' 그 자체의 전환을 목표로 삼아야 그나마 꿈쩍이라도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린 뉴딜은 환경정의와 경제정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아야, 비로소 잡히는 목표다.

3. '정의로운 전환' 계획

탈탄소를 향한 산업의 전환과정에는 수많은 실업자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가령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 발전소를 10년 내 급격히 폐쇄할 경우, 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에 종사해온 노동자들의 실업이 대거 발생한다. 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 석탄 외에도 가스, 석유, 핵,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존의 탄소기반 산업 전체가 일거에 전환하게 될 때, 그 충격과 파장은 가히 재난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 다수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산업전환에 따른 여파로 생존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전환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기후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린뉴딜은 단순히 환경의 가치만을 주창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불평등의 체제' 그 자체의 전환을 목표로 삼아야 그나마 꿈쩍이라도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린 뉴딜은 환경정의와 경제정의 두 마리 토끼를 꺼번에 다 잡아야, 비로소 잡히는 목표다. ”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준비되고 가동되어야 한다. 고용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과 사회적 안전망이 준비되지 않거나 부실할 경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생존의 위협보다 실업에 따른 생존의 위협이 더 직접적이고 절실하기 때문에 전환 자체를 반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심하고 철저한 전환의 위험을 살피고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전환(Unjust Transition)은 그저 '구조조정'에 그치고 만다.

4.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

한편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 말고도, 탄소배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전까지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닥칠 가뭄과 산불,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재해로 인한 총체적 재난은 약자들에게 제일 먼저 들이닥치고 훨씬 참혹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약자들에게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아이들의 돌봄과 노약자들의 돌봄이 가정과 개인의 책임으로 떠맡겨질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근린(동네) 단위의 촘촘한 돌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은 일자리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산업체제에서는 혁신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오히려 혁신을 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다. 혁신이 대체로 '노동절약적'이고 자원집약형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일자리는 축소시킨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정반대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에너지)절약형-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탄소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최근 15년 동안 제조업에서는 30만 명의 종사자가 증가했고, 건설업에서는 그 절반인 15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 반면 같은 15년 동안 130만 명이 증가한 산업 영역은 의료보건 등 돌봄 관련 산업이었다. 이제는 산업단지에서도 공사판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고, 오로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영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인 동네와 마을, 지역에서 일자리가 나온다.

III 로컬뉴딜과 자치분권

일상에서 로컬백트가 원활해지고, 근거리 범위 안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분산형으로 살아가는 로컬형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 잡히려면, 대대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인적-물적 자원과 프로그램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른바 '로컬뉴딜(Local New Deal)'이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로컬뉴딜은 탄소 절감, 불평등 완화와 정의로운 전환,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린 뉴딜의 목표에 철저히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즉 로컬뉴딜은 지방 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실행전략'이 되어야 한다.

1. 로컬뉴딜의 원칙

로컬뉴딜은 시민의 참여가 기본원칙이다. 시민참여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순환경제'(사회연대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기존의 보조금 공모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다양한 자원의 융합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의 실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 수준은 의견제출 정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주민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결정할 할 수 있어야, 참여의 효능감이 생겨 지속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주민 스스로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게 여기는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함께 해결에 나서고,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비스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며 이용하는 '공동생산자'(Co-Produc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어진다. 마을공동체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적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때 사회연대경제(지역순환경제)가 실현된다. 그래야 지역의 회복력(local resilience)이 만들어진다. 재난시대에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회복력에 달려있다. 그래야 재난이 닥쳐도 일상으로 돌아와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로컬뉴딜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몇몇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나 겨우겨우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성과를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성과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많은 혁신적 정책(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사업)의 모델(시제품, prototype)을 만들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실행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여러 행정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융합적인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행정의 칸막이를 허무는 '융합적-협업적 사업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1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된 마을공동체 정책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민들을 등장시켰고, 등장한 주민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내 문제'에서 '동네 문제'로 의제를 옮기며 스스로 공공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마음과 뜻이 맞는 이웃 세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뜻도 맞지 않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동네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려면 '나'보다는 동네 전체의 전반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작게나마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로컬뉴딜의 과제들이다. 문제해결력의 핵심은 융합이다. 행정의 칸막이와 시민사회의 칸막이를 넘어서려면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해결의 솔루션을 가진 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해야" 한다. 동네에서 주민이 나서서 융합적 솔루션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실행체(조직)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동네에서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게 여기는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함께 해결에 나서고,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비스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며 이용하는 ‘공동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어진다.”



2. 로컬뉴딜의 실천방안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로컬뉴딜 정책으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실행과제 몇 가지를 제안해본다.

근린공원과 마을정원 비대면이 지속되면 대면적 교류는 줄어들게 되어, 갑갑증을 호소하거나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기도 한다. ‘근거리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안전한 휴식 공간’이 절실하다. 이른바 ‘숲세권’은 재난사회의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료와 마을돌봄망 ‘로컬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토대는 의료보험제도와 공공의료체계였다. 또한 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일상적 재난시대에는 역부족이다. 로컬 단위로 병상 확보, 의료인 배치, 긴급의료체계 등의 공공의료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동네단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웃들을 상호 돌보는 방역-보건-생활 지원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의 구축하여 분산형 공공의료체계와 협력체계(이른바 ‘의세권’)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마을 돌봄체제 학교에도 갈 수 없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려면 결국 동네에서, 지역에서 함께 챙겨야 한다. 옥외에서 소규모로 분산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마을도서관, 마을놀이터, 마을공원, 마을시장 등과 같이 로컬 거점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마을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공간 등의 자원을 조사한 마을놀이-학습 ‘지도(map)’를 제작하고 놀이-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제 제대로 된 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린 리모델링 도시에서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와 건물의 에너지 비효율성이다. 특히 신축한지 2~30년이 지난 주택들은 단열 시공이 되어있지 않아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탄소배출 감소이라는 공적 목표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에 대한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을 공공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 시공 시, 자연재난에 대비한 내진장치를 보강하거나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낙상 방지용 안전시공(턱 제거, 논 슬립 부착, 가이드바 설치 등)을 결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거복지 수준도 함께 높일 수 있다.

로컬 모빌리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녀도 별 불편이 없고 자전거가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도로체계를 비꾸어 ‘보행친화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자동차를 꼭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지하철과 함께 ‘쾌적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과 자원순환 이제 폐기물은 더 이상 매물과 소각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고 자원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야 재활용 처리가 용이한데, 분리배출을 철저히 유도하려면 ‘분리수거’가 철저히 해야 한다. 수거는 배출장소인 주택들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져야 관리가 용이하므로 동네마다 소규모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의 경우 2만 내외의 주민이 거주하는 동(洞)마다 2~3개 정도의 분리수거 처리장이 있으면 좋다.

로컬푸드 플랜 로컬푸드 플랜은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 급식을 중심으로 식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청년층들의 채식선호가 급격히 늘어가고 학교 급식에서도 학생들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렇듯 로컬푸드 플랜은 '채식과 급식의 지역단위 공급체계'를 만들어 식량위기 시대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로컬 먹거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상발전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선타크와 석유)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행하므로,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일이 기본이다. 가정과 사무실, 산업 현장 등 각각의 소비현장에서 낭비를 줄이고 저에너지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수요반응제도(DR, Demand Response)를 활용하여 전력피크 시기에 전력의 소비 절약은 물론, 상시적인 태양광 생산으로 거대한 발전소 건물과 설비 없이도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읍면동별(아파트 단지별) '가상발전소'를 가동하여 분산-네트 워크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가는 전환의 불가피성을 선언하고, 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달성할 목표와 일정이 담긴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원(재정) 배분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그 규모만 키워서 패키지로 모아 발표하는 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그린뉴딜은 산업의 체계를 바꾸고 일상의 생활방식을 전환하는 일이다. 그것도 시한을 정해 서둘러 전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있거나 또는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상황을 대처해가야 한다. 매우 전략적이고 총체적인 전환을 준비해야 하기에 정부의 하향식(top-down) 전략이 필요하다. 법제도의 정비와 대규모 투자, 산업의 전환과 재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나서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향을 잡고 먼저 움직여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준 후에야 기업과 시민사회가 국가를 믿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국가의 역할과 다르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형편과 시민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제 때에 집행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야말로 시민들의 반응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시민의 체감적 효능감과 정부의 민감한 반응성이 어우러질 때 정책이 지속되는 동력이 생기고 결국 성공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실천전략은 로컬뉴딜이 되어야 한다. ”



야말로 시민들의 반응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시민의 체감적 효능감과 정부의 민감한 반응성이 어우러질 때 정책이 지속되는 동력이 생기고 결국 성공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실천전략은 로컬뉴딜이 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공공정책은 다양한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정책 실험들을 토대로 형성되고 검증되며 확산된다. 지방정부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절박한' 현장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이다. 비록 동원 가능한 자원(재정)은 열악하지만,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는 과감하게 움직인다. 바로 지방정부가 혁신의 현장이다. 이제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자율성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과의 협치를 견인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는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를 돌파할 전략이다.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사

2020년은 전환의 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호주 산불·북극 고온현상·동아시아 대홍수 등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녹색전환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기반을 둔 경제 구조를 유지할수록 기후위기는 심화할 전망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약체(IPCC)의 1.5°C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C 상승했으며, 이대로 배출량이 증가하면 2040년경(2030~2052년) 1.5°C 도 달한다는 것이다. 인류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내에서 안정화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Net Zero)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반영해 등장한 것이 그린 뉴딜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미국 민주당이 2019년 2월 7일,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 결의안’¹⁾을 제출한 이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EU는 2019년 12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딜을 추진하고 있다.²⁾ 그린 뉴딜은 1.5°C 안정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인력, 예산, 자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이다.

“그린 뉴딜로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입해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일자리 66만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다.³⁾ 그린 뉴딜로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입해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일자리 66만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⁴⁾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후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다”며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은 새로운 국제 질서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기반 그린 뉴딜

2020년 6월 5일,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하였고, 7월 7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63개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결성하였다. 정부가 7월 14일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을 발표하기 전에

1) H.Res.109(2018.2.7)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2) EUROPEAN COMMISSION(2019.12.11.) The European Green Deal
3) 4) 관계부처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일부 지방정부들은 이미 그린 뉴딜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3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전환점이 되도록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⁵⁾

특히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그린 뉴딜을 탄소 중립 또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해 정책을 수립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명확히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7월 8일, 그린 뉴딜을 통한 2050년 넷 제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에 집중해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 241개소부터 '그린 리모델링'을 시작한다. 2021년부터 연 면적 1천㎡ 이상인 시 공공건물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건물부문 감축량에 대한 MRV(모니터링, 보고, 인증) 데이터도 축적한다. 서울시 그린 뉴딜의 특징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온실가스총량제, 2035년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같은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개선해야 할 주요법령을 '그린 5법'⁶⁾으로 정리해 관계부처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린 뉴딜 추진 체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5부시장 체제를 도입해 기후부시장을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부시장 직무대행체제로 들어가 조직개편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충청남도는 2020년 6월 5일,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에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5만 6424개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핵심으로, 탈석탄 정책 추진, 농업·산업 분야별 청정연료 전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⁷⁾ 충남연구원은 석탄발전 조기폐쇄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에 대비하는 '정의로운 전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⁸⁾

5) 파이낸셜뉴스(2020.7.21.) 文대통령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지역주도형 뉴딜 추진"[전문]
 6)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 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
 7) 충청남도(2020.6.5) '충남 환경분야 그린뉴딜 사업(충남형 그린뉴딜)' 충청남도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발표자료
 8) 여형범(2020.6.30.) '충청남도 그린 뉴딜 추진방안 국회' 지방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발표문. 국회 이소영 의원실 주최

광주광역시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민·관·산·학의 협력과 광주시의회의 활동이 돋보이는 곳이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시장직속 자문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2050 탄소중립도시 달성'(안)을 마련해 광주시 그린 뉴딜의 토대를 만들었다.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혁신위원, 시의원, 기후 활동가, 연구자 12명이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특위를 구성하고 3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수립했는데, 이는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이 매주 금요일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등 시민들의 활동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기후위기대응 광주공동체 비상본부를 설치하고, 2045 탄소중립도시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상남도는 에너지전환과 탄소 중립 경제를 지향하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추진 선박, 자동차, 가스터빈, 풍력발전기술, 에너지자립산단, 스마트 산단 등 산업부문의 전환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⁹⁾

〈표 1〉 광역지자체 그린 뉴딜 수립 현황

지자체	대표 그린 뉴딜 정책
서울특별시	2050년 넷 제로 목표와 경로 설정,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과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등 건물부문 대책 집중,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 기후부시장제 도입(유보)
부산광역시	풍수해 재난대응 안전도시, 그린 해양신산업 육성, 서부산권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차세대 상수도 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워터 시스템 구축
인천광역시	국제 그린스마트 타워 조성,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 친환경 에너지 비율 1.7%(2020) → 16%(2025) 이상 달성
광주광역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시 기반 에너지 수요·공급 양방향 관리시스템, 에너지전환영향평가제 준비, 기후위기대응 광주공동체 비상본부 설치, 2045 탄소중립도시 시민위원회 구성
대전광역시	도심융합특구사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울산광역시	부유식 해상풍력 환태평양 허브도시 조성,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대형 공공시설(종합운동장, 공원 등) 주차장을 활용한 메가스테이션, 충전 인프라 확대, 도시숲 조성
경기도	수소융합테마도시 조성, 반월시화 그린 산단,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강원도	액화수소 산업 - 드론 택시, 수소기차,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 액화수소도시
충청북도	바이오·태양광 등 충북 6대 신성장산업 활성화

9) 남중석(2020.6.30.) '경남의 에너지 체제 전환과 그린 뉴딜' 지방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발표문. 국회 이소영 의원실 주최

충청남도	전국 탈석탄 금고 확대. 지역에너지 산업 전환 지원(탈석탄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 대응). 수소도시 조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부남호 역간척
전라북도	새만금 해상풍력(3.97GW), 태양광(2.5GW),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완주 수소 상용차 산업
전라남도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상풍력을 통한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경상북도	①디지털뉴딜 ②그린뉴딜③안전망 강화에 지역 핵심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건설
경상남도	동남권메가시티를 위한 광역대중교통망.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물류시스템 포함 수소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연계 재생에너지 확대. 2030년 내연기관 등록 금지. 2023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전력거래 자유화 요구

출처: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지자체 발표자료에서 그린 뉴딜 관련 정책 재구성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시하는 그린 뉴딜 대표 정책을 <표 1>로 정리하였다. 광역지자체의 그린 뉴딜 정책을 살펴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그린 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그린 뉴딜의 목표와 성과평가 지표는 온실가스 감축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충청남도, 광주시 정도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기후재난을 강조하면서, 그 유일한 대안이 액화수소라고 강조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액화수소는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를 사용하기에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린 뉴딜의 핵심 에너지원은 수소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수소를 안 내세우는 지자체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

도지사는 제주도는 10년 동안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추진해온 모범 사례라고 하지만, 카본프리아일랜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중요 성과지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8일,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를 발족했다.

선언에 참여한 지자체는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내용을 그린 뉴딜에 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2050년 넷 제로 로드맵을 만든 유일한 지자체이고, 인천시가 탄소중립계획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광역에서 기초로 갈수록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식 통계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기반 온실가스 통계 조사와 분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린 뉴딜의 목표를 공유하지 않은 결과 지자체의 뉴딜 정책에 대규모 토목개발 사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부산시는 동남권 관문 신공항,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대구와 울산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취수원 다변화),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뉴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공항건설 계획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국가계획·2021~2025년)과 연동해 있다. 현재 건설예정 계획 중이 추가 공항만 6개가 넘어 '1 광역지자체 1 공항'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독 공항과 철도 지하화 같은 교통부문의 개발계획이 많은데, 이는 토목 건설,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더불어 교통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체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정부의 역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에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저출생·고령화·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자체 1공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멈춰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린 뉴딜의 핵심 에너지원은 수소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수소를 안 내세우는 지자체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특히 강원도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드론 택시, 수소기차,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 액화수소도시 등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수소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나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해

상풍력을 이용한 그린 수소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활성화 전략을 포함해 지자체에 지원 신호를 준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등 바다를 낀 지자체들은 그린 뉴딜에 해상풍력을 담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그린 뉴딜 정책에 담겨야 한다.

정부가 그린 뉴딜에 대한 정확한 목표에 방향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에 따른 지자체별 전략 방향에 대해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광역지자체의 그린 뉴딜 계획도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촉발하는 정책으로 준비되고 있다. 지역균형뉴딜에서 제기된 동남권메가시티를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대구·경북 행정 통합 △광주·전남 통합 △충청권)에 대해서도 좌초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은 확실히 녹색으로 잡아야 한다. 프랑스 팀머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의 경기부양 경제 정책에 있어, “단 1유로라도 과거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지역기반 그린 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 13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앙공모방식 등을 보완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안은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 관련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다. 가산점으로 줄 세우는 방식은 여전하다. 그린 뉴딜에 포괄예산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지자체의 그린 뉴딜 정책도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대폭 수정보완해야 한다.

지역기반 그린 뉴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17개 광역지자체는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자체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기존 인프라를 개선해 재난과 재해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지역에서 온실가스 다배출하는 곳을 중심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에 옮길 행정조직을 갖추고, 지자체장·공무원부터 시작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습과 인식을 높여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

력도 키워야 하는데, 이는 지역 시민사회 역할이기도 하다. 행정자치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 디지털, 그린, 안전망에 지역 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도에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시도 뉴딜 추진단 설치, 뉴딜 전담부서 지정, 지역균형 뉴딜 인력 수요 반영을 약속했다. 부족하나마 이를 활용해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지역균형 뉴딜이 재편하도록 역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그린 뉴딜에 있어 에너지 부문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린 뉴딜은 지역의 에너지전환, 에너지분권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역분산형에너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2019년 17개 광역지자체가 일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미 지자체가 수립해 놓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가 있다. 이 계획을 그린 뉴딜과 연결해 에너지전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에너지 전환과 연계해 수요자원시장(DR), RE100, 주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 전력중개사업 등 제도기반도 구축 중이다.

그린 뉴딜은 지자체의 참여와 에너지 자치분권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성공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기반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수립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지자체의 참여와
에너지 자치분권,
그린 뉴딜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성공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기반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재구성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14
- 남종석, “경남의 에너지 체제 전환과 그린 뉴딜”, 국회 지방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발표문, 2020.6.30.
- 여형범, “충청남도 그린 뉴딜 추진방안”, 국회 지방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발표문, 2020.6.30.
-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202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박원순 시장, ‘서울판 그린뉴딜’로 경제위기·기후위기 동시극복, 2020.7.8.
- 유정민, “그린 뉴딜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 서울시 기후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국회 지방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발표문, 2020.6.30.
- 이윤진,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19-10, 2019.
- 이윤진, 2020. 지역기반 그린 뉴딜 활성화 방안. 에너지포커스 2020년 여름호, 제17권 제2호 통권76호, 에너지경제연구원
- 행정안전부(2020.7.17.) [보도자료] 지자체 맞춤형 뉴딜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 모델 만든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배경과 특징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코로나19 경제충격과 회복전략

2020년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인류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전파는 과거 메르스나 사스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었다. 우선 전 세계적 확산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2020년 1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 우한지역에 국한되었던 바이러스 감염은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아시아 전역과 유럽은 물론 북미지역, 심지어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국제보건기구(WHO)는 3월 12일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뜻에서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로 손쓸 틈 없는 전염병의 급격한 확산은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중지라는 방법 말고는 다른 처방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심한 경우에 완전 외출자



“ 정부의 회복정책은 통상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차원과 기후변화의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즉,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의 성격과 방향은 코로나19가 경제에 준 단기적 충격과 중장기적인 안전한 미래설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고려된다. ”

제를 의미하는 대봉쇄(Lock Down)가 각 국가와 도시들에서 강행되었고, 아니면 다양한 강도의 거리두기를 통해 의료자원 감당범위에서의 급격한 확산을 막는 도리밖에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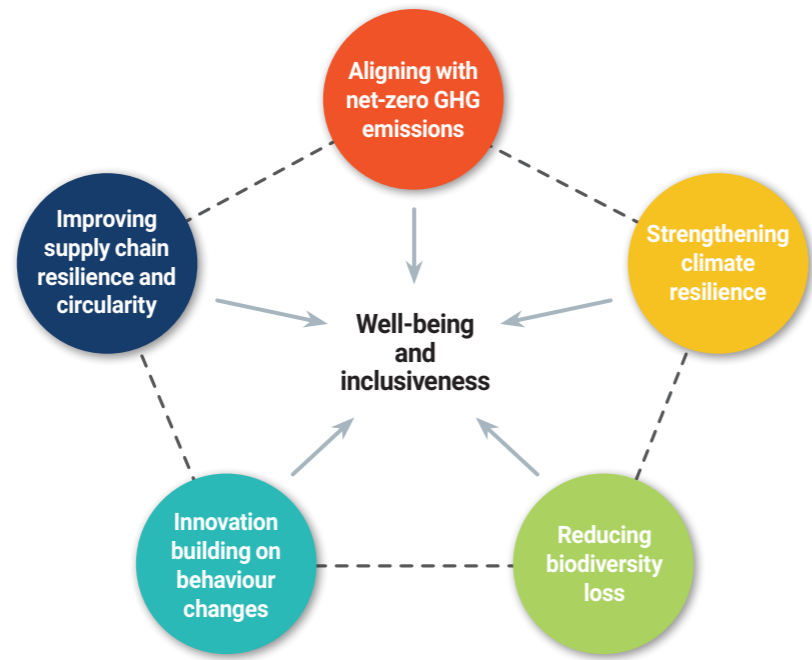
세 번째로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가 시민들의 활동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보건위기를 넘어서 그 이상의 심각한 경제충격으로 전이되었다. 재택근무 등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등 공급 충격이 가시화되었다. 소비자들의 활동축소와 다중시설 폐쇄 등으로 소비 충격은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또한 소득손실이 누적되면서 잠재적 금융충격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의 경제성장기조가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었다. 국제노동 기구에서는 약 3억 개의 일자리가 세계적으로 위협에 빠지게 되었다고 진단했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적어도 -3%~-7%에 이르는 수준의 역성장을 할 것이 예상되었다. 한국도 일자리 증가가 곧바로 마이너스에 빠졌고,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타국에 비해 선방한다고 했지만 마이너스에 빠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3~4월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이후의 경기회복을 어떤 방향과 정책수단으로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체로 합의한 큰 원칙은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통해 조속히 사회안전망을 복구하고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소득손실로 구매력이 극도로 위축된 가계나, 여전한 전염병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 행위 등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이 경기 회복을 선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수단을 통한 정부의 경기 회복정책이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주목받게 된다.

한편, 정부의 회복정책은 통상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차원과 기후변화의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즉, 정부의 경기회복정책의 성격과 방향은 코로나19가 경제에 준 단기적 충격과 중장기적인 안전한 미래설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고려된다.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은 가장 먼저 역점을 둔 대상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취약한 곳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소수인종, 여성, 빈민, 불안전 취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등 인수공통감염 신종 전염병이 산림파괴와 기후 온난화 등 환경

악화의 직 간접적인 결과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미래의 안전까지를 감안한 회복전략으로서 '녹색회복(green recovery)'이 OECD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공식 기관들에서 나오는 모범답안처럼 되었다. 특히나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 미래 발전전략으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 정책화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녹색회복 전략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포스트 코로나 회복전략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림 1〉 코로나19이후 더 나은 회복을 위한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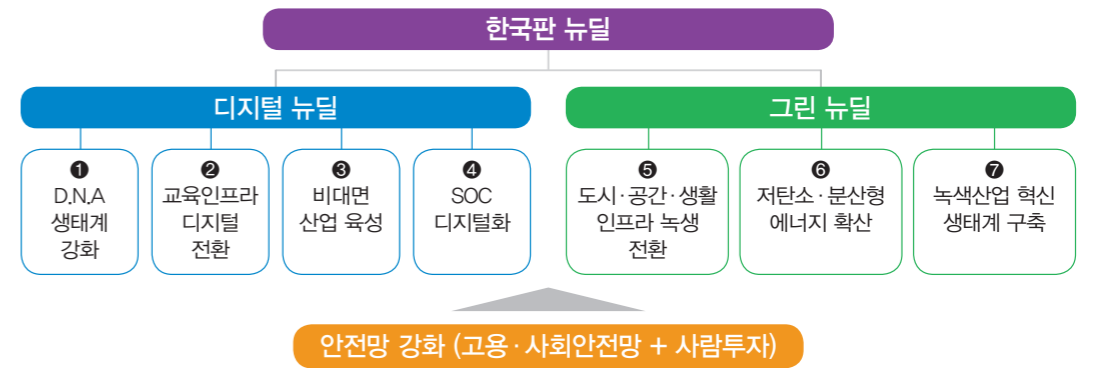
(출처: OECD 2020)

‘한국판 뉴딜’의 구성과 특징

한국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명명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기회복정책을 입안한 배경이나 취지도 다르지 않다. 4.15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22일,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 프로그램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이때부터 한국판 뉴딜은 이른바 ‘비대면

원격의료, 교육’ 등을 상징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4개 부처에 그린뉴딜을 위한 기획안을 서면보고하라고 요청하면서 그린 뉴딜이 추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영역이 추가되는데 이는 2019년 경제인문 사회연구회가 ‘전환적 뉴딜’이라는 이름아래 제안했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휴먼 뉴딜’ 부분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미 화두를 꺼낸 ‘전국민고용보험의 단계적 실시’가 이 영역을 채워준다. 이렇게 급박한 속도로 구성되어간 기획안의 최종 버전이, 7월 14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형식을 빌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으로 발표된다.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사이에 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원이 투입되는 종합국가 프로젝트가 확정된 것이다.

〈그림 2〉 한국판 뉴딜의 전체 구조



(출처: 정부발표자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중심으로 설정한 점이다. 디지털 뉴딜은 국비 기준으로 보면 44.8조원, 일자리도 약 90만개로서, 그린 뉴딜보다 규모나 비중 면에서 훨씬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는 우리정부가 이전부터 4차산업 혁명과 D.N.A(Data, Network, AI)등을 강조해왔던 맥락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산업구조상 ICT분야의 강점을 경기회복에서도 살려나가



자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디지털 분야는 이미 민간 경제주체들이 이미 충분히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공공이 개입해서 더 활성화시킬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등 이 분야의 일자리가 소수를 제외하고는 열악한 일자리라는 점 등을 들어 디지털 뉴딜이 너무 과대하게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한편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을 구성하고 있는 그린 뉴딜을 살펴보자. 앞서 잠시 확인한 것처럼, 이번 코로나19전염병이 직간접적으로 환경악화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상으로 미래 인류를 위협할 핵심요소로 기후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회복을 녹색회복으로 하자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존재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이 민주당 선거공약으로 구체화되어 왔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이미 2019년 말 발표했고, 실행계획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이 주요 영역에 배치된 것은 이런 국내외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버전의 그린 뉴딜이 과감한 정책비전으로 평가되기에는 미흡한 대목이 있다. 예산도 73.4조로서 최대라고 하지만, 사실 국비 기준으로 보면 42.7조로 연간 10조도 되지 않는다. 주요 역점분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잡고 있지만, 공공부문으로 지극히 제한된 ‘그린 리모델링’

정도를 추가한 것 외에는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해외의 그린 뉴딜 정책들이 명시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절반 감축을 내걸고 전기생산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 100% 목표를 잡고 있다든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판매 금지나 도시 진입금지와 같은 획기적으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세 번째 요소인 사회 안전망 구축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장과 일종의 ‘휴면뉴딜’ 성격의 인적자원투자 등이 있다. 특히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 등 광범한 불안정 노동계층과 소득계층의 소득 안전망이 매우 부실했음이 코로나19로 인해 확인되어서 새롭게 사회안전망 강화를 해야 할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다. 다만 전국민고용보험으로의 확대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기획된 점은 현재의 시급한 고용불안과 소득 불안정 상황과 견주어 너무 느리게 아닌가 하는 평가도 가능하다.

“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공공재원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이후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공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자본과 각 계층의 이해관계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국가적으로 100조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5년 국가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늘어난 비대면 상황에 대처하는 디지털 뉴딜, 기후위기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린뉴딜, 그리고 경제충격 가운데에서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사회안전망과 소득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보강하자는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공공재원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배분하는 가는 이후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공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자본과 각 계층의 이해관계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원을 더 많이 가진 계층의 양보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사회구성원 사이에 일종의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뉴딜(New Deal)’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워낙 긴급한 상황에서 제안되고 기획되다 보니, 한국판 뉴딜이 충분한 사회적 공론장 형성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21대 정기국회과정에서 좀 더 충분히 각 분야별로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토론과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다

경상남도의회
황재은 의원 인터뷰

• INTERVIEWER
박현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현욱 — 황재은 의원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재은 — 안녕하세요? 저는 제11대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황재은 의원입니다. 열린우리당 창립위원을 시작으로 현재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 배속되어 있으면서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그 밖에도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심사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여성의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천시민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 하였습니다.

박현욱 — 경상남도의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재은 — 경상남도의회는 1952년 한국전쟁 시 당시 도청 소재지였던 부산에서 개원하여 제3대까지 활동하였고, 지방자치제가 전면 유예된 헌정사의 아픔에 따라 약 30여 년간 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1991년 다시 제4대 경상남도의회로 이곳 창원에서 재개원하고 현재 1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황재은
경상남도 의회의원

총 58명(현원 57명)의 의원님이 계시고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의 6개 상임위원과 상설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2곳까지 총 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손발이라 할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 이하 3담당관(총무, 의사, 입법), 6전문위원실(기획행정, 교육, 농해양수산, 경제환경, 건설소방 문화복지) 등에 총 15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경남도정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경남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현욱 —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또는 개정 조례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황재은 — 저는 제11대 경상남도의회에 등원해서 현재까지 총 7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2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가 여성인데다가 등원 전에 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여성, 자치, 교육, 참여 등과 같은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 이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회 의원님께서도 그러하시겠지만, 지방의회 현실상 특별한 지원 인력도



없이 의원 혼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힘겹게 만든 조례들인 만큼 마치 제 자식과 같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자면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조례와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모두 농어촌 지역의 소외된 학생과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들인데, 낮은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욱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기억이 납니다. 즉, 도의원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소외된 계층과 사람들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그로 인해 한 쪽으로 치우친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이 생각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박현욱 ● 의원발의 외에도 의원님께서 광역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상황이 있으신지요?

황재은 ● 저는 비례대표로 의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음달

11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사천-진주 광역버스 체제를 구축한 것과 사천공항 활성화 및 항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한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특히 사천-진주 광역버스의 경우 사천과 진주가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칸막이 행정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등원해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논의가 올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천은 국내 항공 산업의 메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여러 항공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항공 수요가 대폭 감소하자 여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점차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현욱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도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은 ● 경상남도는 지난 3월 모 종교단체에 의해 코로나19 사태가 폭증했던 대구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염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경상남도는 인구대비 감염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으며 특히나 도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셔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임시회 회기를 단축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활성화 하는 등 의회 자체적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김경수 지사의 각종 정책들, 이를테면 경남형 기본소득,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도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만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도민들의 얼굴에 눈물을 닦아드리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욱 ● 최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황재은 ●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통상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는 물론 그 전부터 누적되어 온 고령화 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그리고 저출생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이 서서히 약화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비상한 방법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현욱 ● 행정안전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황재은 ● 지난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여러 시·도지사님께서 참여하여 지역별 뉴딜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김경수 지사님께서 참석하시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에 대해 경상남도 특색을 반영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상남도의 노후화된 산업시설을 스마트화하여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주로 중부와 동부경남의 도시지역을 위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경남과 농어촌지역에서도 여러 대응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상남도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들이 빠짐없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현욱 ● 경상남도 의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추구하시는 경상남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재은 ● 잘 알다시피 경상남도는 동부 및 중부의 도시지역과 서부의 농어촌 지역으로 대별됩니다. 국가차원에서도 균형 발전이 큰 테마로 작용하듯이 경상남도라는 지역적 테두리 내에서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상남도 도민이면 도내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도민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뿐만 아니라 양성이나 소득, 학력 등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대우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는 곳이 되길 희망합니다.

박현욱 ●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소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은 ●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를 보는 일반의 싸늘한 시선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간간히 언론 지상을 통해 나올 때면 스스로 얼굴이 화끈 거리기도 합니다. 모두 우리 의원들의 개인적 역량에서 오는 차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력과 집행부에서조차 분리되지 못한 지방의회 인사권 등의 문제를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 잘못해서 저런 말들이 나올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7월에 제출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내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지방의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방의회가 바로서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소망해 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다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 인터뷰

• INTERVIEWER

최인수 ·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KRILA • 안녕하세요? 의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서초구의회와 의장님의 주요 의정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 저는 지난 2010년 서초구의회 초선으로 첫 발을 들인 이래, 더 나은 서초, 더 행복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들을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사회적약자와 소외계층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들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8대 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서초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역 구석구석의 어려움을 챙기는 한편,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구의원으로서의 해결할 수 없는 구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더러 한계도 경험한



김안숙 의장
제298회 제3차 본회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해결 여부를 떠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구민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는 이들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구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 또한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구민의 입장, 특히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의 대변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늘 스스로를 채찍질해봅니다. 지금도 제 의장실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지 찾아와서 함께 논의하고 소통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2018년 12월 5일에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행복지수 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과 의정활동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의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24명의 대상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수상자에 대한 평가는 2016년 11월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지표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에 대한 치밀한 연구개발을 거쳐 진행·심사하므로 그 어떤 평가보다 가치 있고 영예로운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KRILA — 의장님께서 지난 2020년 7월 서초구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향후 서초구의회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의장’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임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앞으로 구민 행복과 서초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with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회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의 정활동의 방법도,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합니다. 구민과 만나는 방식부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전보다 더 많이 연대함으로써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 싶습니다. 의회가 구민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임기 내내 모든 결정에 있어 항상 스스로에게 묻겠습니다.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제8대 후반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중용 23장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KRILA —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나타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을 잊지 않고 늘 처음처럼! 열심히! 의정활동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KRILA — 의장님께서 서초구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조례제정, 행정감사,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 — 제가 발의한 조례로 첫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과천시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어진흥의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4조),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방법 규정(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방법 규정(안 제7조), 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8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안 제9조) 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의 위탁(안 제7조 및 제8조) 등입니다. 생활정치의 구현과 서초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가 주도하여 (사)생활정치아카데미(원장 추성춘)와 함께 2018년 10월 6일에 생활조례를 만드는 서초구 구민회의를 발족시켰습니다. 서초구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조례를 구의원과 지역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주민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초구민의 생활을 이해하고 서초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초구의 맞춤형 생활조례를 만들어서 주민과 호흡하는 발로 뛰는 서초구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RILA — 자치분권과 서초구의 발전을 위하여 서초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안숙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는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민주권의 구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관(官) 중심의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서초구민체육대회



행복위 현장방문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정책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중심으로 지방자치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초구의 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서초구의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초구차원에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초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보다 집행부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서초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일자리, 생활안전, 감염병 등 보건의료 등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나 예산 등의 승인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서초구의회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초구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중요합니다. 서초구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주관으로 정책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나 기존 조례의 개정 등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할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초구 예산의 심의, 주민참여예산액의 결정 등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서초구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KRILA ● 현재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시급한 현안 과제 혹은 풀어야 할 숙제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 2020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한 서초는 이제 차원이 다른 구정으로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미래 도시’ 서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의회는 당장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화려하지 않더라도 보다 많은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지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서초를 만드는 정책에 적극적인 재정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차이의 인정’ 속에 서로가 타협과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민을 위한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자문을 구하고, 풀리지 않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의회가 되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동반자 의식을 갖고 서초의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서리폴터널 내방역쪽 상부 활용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서리폴터널 상부는 당초 서초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일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녹지 조성은 공사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답입니다.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누구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인지, 효과는 어떠한지, 어떤 유형의 갈등이 존재하는지 등을 집행부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설날 명절에는 다른 서초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평소 명절이 되어도 떡국을 맛볼 수 없었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명절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접 떡국을 썰고 사골국물 담아 마련한 떡국세트 160여 개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제8대 서초구의회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을 북돋아주고자 작년 9월 처음 진행한 ‘추석맞이 모듬전 부치기’ 자원봉사가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에 소문을 들은 타 복지관들도 아쉬움을 드러내며 동참을 위해 금번에 같이 하기로 했으며, 총 160개 떡국세트를 3개 복지관을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KRILA ● 지방의정활동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위하여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김안숙 ●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등을 논의할 경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보충성의 원

칙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일(사무)을 먼저 시군구에 배분하고, 자원이나 역량 등이 부족하여 시군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은 상위 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수행하고, 시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향식 민주주의가 아닌 하향식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에 이양할 중앙정부의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여 지방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의 20% 정도만을 지방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민생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의 사업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민생관련 정책의 대부분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주민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권한, 관련 예산과 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국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서초구 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강화하고, 서초구의 맞춤형 주민생활 서비스 추진을 위한 재량권을 확대해 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초구 공동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와 협력을 위한 정규적인 조직기구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KRILA — 한국판 뉴딜정책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서초구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의장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 방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안숙 —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합니다.

한국판 뉴딜과 4차 산업혁명은 상호 연계성이 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첫 번째 사업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



추석선물의연품

모범청소년 표창 수여식

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교통과 물류시스템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그린 뉴딜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라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도 양재천 등 하천과 우면산 등의 자연생태계 보호, 온실가스 배출량의 축소, 교통량 조정, 미세먼지 축소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셋째, 서초구민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초구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초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발판으로 지역 일자리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자치경찰 제도의 입법 논의와 쟁점



I 들어가며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7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통해 연내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과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제출을 통해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제주도에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에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면,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현행 일원화된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최근 변화된 집권당과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조직을 구분하여 각각 지휘·감독 권한을 따로 두도록 한 제20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서 변화된 것으로 기존의 이원화 모델이 자치경찰이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II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변천 과정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전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주도에 제한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을 뿐이다.

2003년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지방분권 주요 과제로 명시했으며, 2005년에는 정부안으로 「자치경찰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13년에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처럼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지속된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강화된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6월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9년에는 홍익표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당시 개정안은 광역 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가경찰이 전국 단위의 치안 사무를 담당하되,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중앙 집권화된 경찰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곤 했으며, 시범 실시되고 있던 제주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중으로 운영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이나 일선에서의 혼란 등이 발생하는 등 자치경찰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¹⁾ 그럼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화될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자치경찰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 최미경, 2019,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NARS 현안분석 제85호

〈표 1〉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주요 경과

시기	주요 정책
2002년 이전	- 15대 대선에서 국민회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함. - 1998년 경찰제도개혁위원회, 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 지방자치경찰제기획단 등이 자치경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였고,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함.
02년 ~ 06년	- 2003년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로드맵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지방분권 주요과제로 명시함. - 2004년 자치경찰제 도입의무를 규정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2005년 정부와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법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됨. - 2006년 제주도에 제한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07년 ~ 16년	- 2008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나, 자치경찰제 도입의무는 지속 규정 - 2013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되고, 자치경찰제 도입의무 규정은 존속 - 2013년 7월 이철우의원 대표발의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됨. - 2013년 9월 안전행정부 "경찰조직 활성화 방안"에 자치경찰제도 추진이 포함
17년 ~ 현재	-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이 포함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권고 - 2018년 6월 정부가 「경·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 발표 - 2019년 2월 당정청합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제 추진방안 발표 - 2019년 3월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 2020년 8월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출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9.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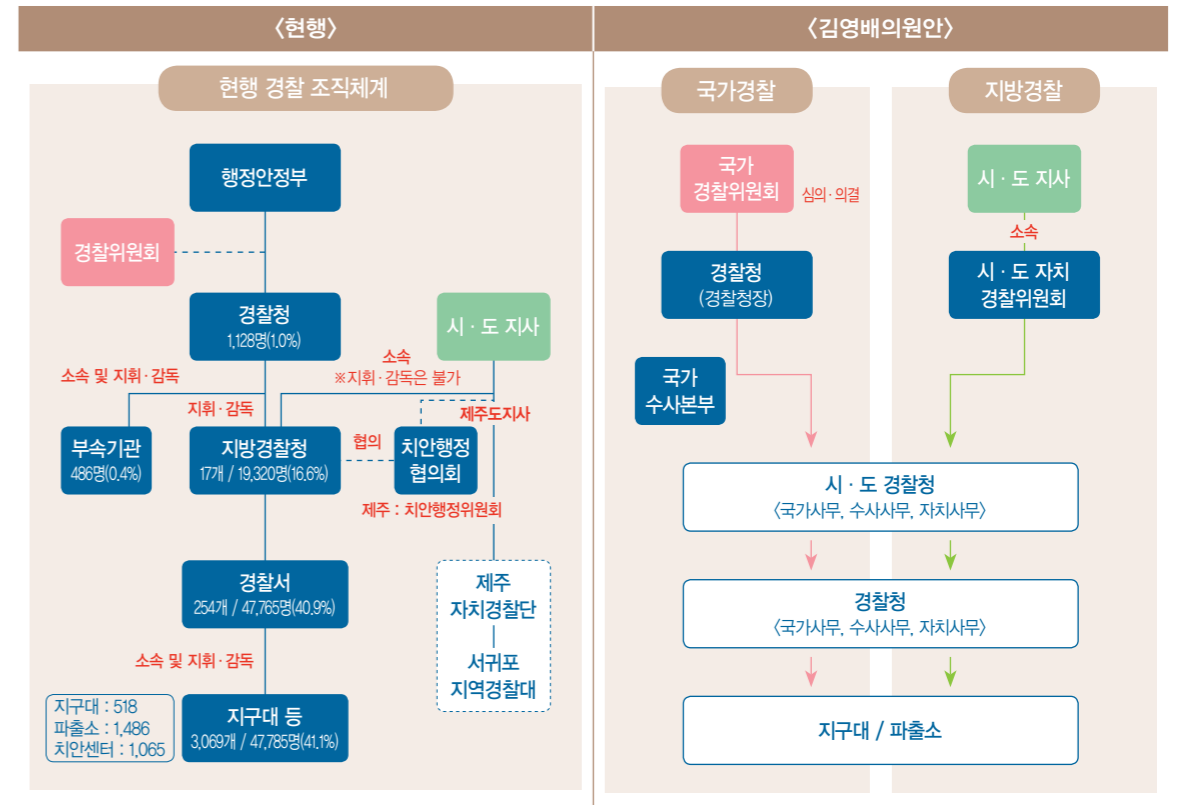
III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의 변화

국회에서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는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이원화 모델에서 제21대 국회에서는 일원화 모델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변화는 제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2019.3.11.)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의원안(2020.8.4.)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두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홍익표의원안은 자치경찰조직(시·도자치경찰본부)과 국가경찰조직(지방경찰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반면, 김영배의원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유지한 채 조직 내부에서 담당 사무를 구분한다.²⁾

김영배의원안은 현행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에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모두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경찰사무를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사무와 수사사무의 지휘·감독권을 구분한 것이다.

2)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9. pp.15-16

〈그림 1〉 현행 경찰 조직체계와 김영배의원안의 비교



출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9. p.14.

IV 나가며

자치경찰 제도는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되어 온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확대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치경찰 제도가 민생 치안의 확대에 기여하기보다 지역 기득권 세력과의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개정 방향이 기존의 이원화 모델에서 일원화 모델로 변화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9.
- 최미경, 2019,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NARS 현안분석 제85호
- 최미경, 2020,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NARS 현안분석 제131호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Simple.do>)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방안



이광춘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겸임교수

I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가계 부채 증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정부 재정 건정성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자리를 잡으면서 디지털 격차 확대와 인공지능(AI) 부상으로 자동화 추세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적 위기와 사회변혁 상황에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초대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성장의 양대축으로 삼고 안전망 강화를 통해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해 사회적 안전판을 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단순히 인구와 국내총생산만으로 주로 평가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인간개발지수(HDI), 부패인식지수(CPI), 경제자유지수(IEF), 민주화 지수, 세계평화지수(GPI) 등이 추가된 것도 얼마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부상하면서 다시 OECD 국가를 디지털 전환이 빠른 국가와 느린 국가로 양분되고 있으며 이제는 AI 준비성(AI Readiness), 디지털 경쟁력(Digital



Competitiveness),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 등에서 좋은 평가를 갖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심화된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에서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2020년 10월 주요 지자체장이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정책 대하여 글로벌 경쟁력, 디지털 경쟁력, 데이터 경제, AI 준비성, 디지털 정부, 자동화 측면에서 디지털의 특성상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위험성과 지역균형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뉴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OECD 국가에 가입된 이후, 코로나19로 촉발된 극심한 경기침체를 조기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시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미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었고, 더불어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도 증폭된다. 이런 와중에 수출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최악의 경제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는 “코로나19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2년이 걸릴 디지털 대전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라고 언급했듯이 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사회 전분야에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와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그린 경제로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린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 전환이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언급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그린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재편을 가져오게 되고, 코로나19로 이런 변화가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양극화는 가시화되고 있다.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플랫폼 노동과 원격근무 확대에 따라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 미스매치, 자동화에 따른 저숙련 노동 수요 감소로 인해 실업은 증가하고 일자리 양과 질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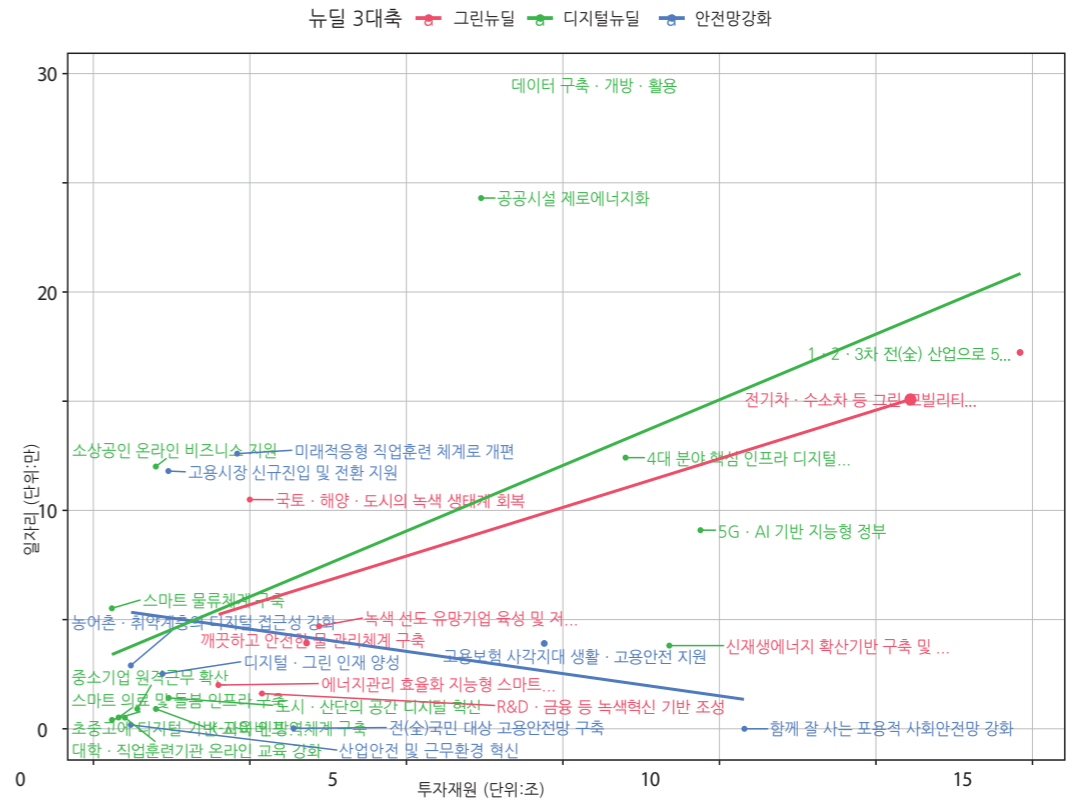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성장의 양대축으로 삼고 심화되는 불평등을 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판을 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발표되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디지털 뉴딜이 44.8조 투자되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유사한 규모로 그린 뉴딜에 투자가 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에 약 32조를 투자하고 SOC 디지털화에 10조로 대부분의 재원이 투자된다. 다시 D,N,A 생태계 강화는 D에 해당되는 데이터 댐 구축, N에 해당되는 5G, A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을 1,2,3차 전산업으로 5G AI 융합확산에 대략 20조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이 가장 많은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다시 대략의 일자리는 D,N,A 생태계 강화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댐”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여 5G와 인공지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림 1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과제별 투자재원과 일자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가지 분야로 투자대비 일자리 창출을 비교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일자리 창출이 주도되고, 특히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은 투자재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나타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축적,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ling) 사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III OECD 국가 디지털 역량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보자. OECD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지표로 인구, 국내총생산, 1인당 GDP를 들 수 있으나, 이러한 지표가 갖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추가 지표가 개발되었으나, 디지털 역량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새로운 지표들이 권위있는 기관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다양한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정책이 갖는 시사점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도별 OECD 가입 국가

영문 위키백과사전 OECD 국가별 가입연도를 통해 선진국에 가입되는 국가에 대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OECD가 태동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64년 가입을 시작했으며 1970년대 호주와 뉴질랜드도 가입했고, 80년대는 주춤하고 다시 90년대 들어서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 인접국이 가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

과거 선진국을 인구, 국민총생산만(GDP), 국토면적을 중요지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부패관련 지표, 민주화 관련 지표, 국가 안정성 지표 등 다양한 지표가 제안되고 있다. 면적, 인구, 국민총생산 외에 거의 매년 권위있는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중요지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HDI: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FSI: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 CPI: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IEF: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 GPI: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 WPI: 언론자유지수(Reporters Without Borders)
- DI: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

IV 디지털 경쟁력 지표

영국에서 촉발된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대부분의 국가는 OECD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한국을 비롯한 후발국이 OECD에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앞서 정의한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전통적인 OECD 국가를 평가하듯이 디지털도 전자정부,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준비성, 디지털 경쟁력 지표 등을 새롭게 고안하여 평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순위

국가경쟁력을 과거 인구와 국민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라고 했다면 새로운 대안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에서 언급된 데이터 총생산 (GDP, Gross Data Product)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경제활동 지표로 제시되고 있고 다음 4가지 하위평가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양(Volume), 사용(Usage), 접근성(Accessibility), 복잡성(Complexity)

- 양(Volume): 원데이터 생산량을 추정하는 대안으로 한 국가에서 소비되는 광대역통신 절대량
- 사용(Usage): 인터넷에서 실제 활동중인 사용자수.
- 접근성(Accessibility): 데이터 흐름의 제도적 개방성
- 복잡성(Complexity): 인당 광대역 소비량

country	flags	gdp	population	gdp_per_capita	데이터경제_순위
United States	US	19,391	326	59,532	1
United Kingdom	GB	2,857	66	43,269	2
Switzerland		548	8	64,712	4
Korea, South	KR	1,973	51	38,335	5
France	FR	2,876	67	42,850	6
Canada		1,714	37	46,705	7
Sweden	SE	505	10	50,208	8
Australia		1,192	25	48,460	9
Czech Republic		385	11	36,327	10
Japan	JP	5,487	127	43,279	11
New Zealand		197	5	41,109	12
Germany	DE	4,188	83	50,639	13
Spain	ES	1,770	47	37,998	14
Ireland	IE	364	5	75,648	15
Italy	IT	2,387	61	39,427	16
Portugal	PT	326	10	31,673	17
Mexico		2,358	129	18,258	18
Chile		445	18	24,635	20
Poland		1,102	38	29,026	21
Greece	GR	297	11	27,602	23
Hungary		275	10	28,108	26
Turkey	TR	2,140	81	29,505	29
Austria		462	9	52,398	
Belgium	BE	544	11	47,840	
Colombia		709	49	14,507	
Denmark	DK	296	6	51,364	
Estonia	EI	42	1	31,742	
Finland	FI	247	6	44,866	
Iceland	IS	18	0	53,153	
Israel		333	9	38,262	
Latvia		54	2	27,598	
Lithuania		91	3	32,092	
Netherlands		900	17	52,503	
Norway		324	5	61,414	
Slovakia		172	5	31,616	
Slovenia		72	2	34,868	

세계 경쟁력 보고서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민간 국제기관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인, 정치인 등을 초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는 2018년부터 시의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삭제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 추가하여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에는 141개국으로부터 4대 분야, 12개 부문, 103개 지표(통계 56개, 설문 47개)를 통해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했다. 환경부문에 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이 포함되어 있다.

country	flags	gdp	population	gdp_per_capita	데이터경제_순위
United States	US	19,391	326	59,532	1
Netherlands		900	17	52,503	3
Switzerland		548	8	64,712	4
Japan	JP	5,487	127	43,279	5
Germany	DE	4,188	83	50,639	6
Sweden	SE	505	10	50,208	7
United Kingdom	GB	2,857	66	43,269	8
Denmark	DK	296	6	51,364	9
Finland	FI	247	6	44,866	10
Korea, South	KR	1,973	51	38,335	12
Canada		1,714	37	46,705	13
France	FR	2,876	67	42,850	14
Australia		1,192	25	48,460	15
Norway		324	5	61,414	16
New Zealand		197	5	41,109	18
Israel		333	9	38,262	19
Austria		462	9	52,398	20
Belgium	BE	544	11	47,840	21
Spain	ES	1,770	47	37,998	22
Ireland	IE	364	5	75,648	23
Iceland	IS	18	0	53,153	25
Italy	IT	2,387	61	39,427	29
Estonia	EE	42	1	31,742	30
Czech Republic		385	11	36,327	31
Chile		445	18	24,635	32
Portugal	PT	326	10	31,673	33
Slovenia	SI	72	2	34,868	34
Poland		1,102	38	29,026	36
Lithuania		91	3	32,092	38
Latvia		54	2	27,598	40
Slovakia	SK	172	5	31,616	41
Hungary		275	10	28,108	46
Mexico		2,358	129	18,258	48
Colombia		709	49	14,507	57
Greece	GR	297	11	27,602	59
Turkey	TR	2,140	81	29,505	61

IMD 세계 경쟁력 연감

IMD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으로 1989년부터 매년 IMD 세계 경쟁력 순위(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를 발표하고 있다. The 2020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보고서는 경제운용성, 정부 행정효율성,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4개 부문과 하위 20개 항목 총 332개 지표를 통해 63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country	flags	gdp	population	gdp_per_capita	데이터경제 순위
United States	US	19,391	326	59,532	1
Denmark	DK	296	6	51,364	3
Sweden	SE	505	10	50,208	4
Switzerland		548	8	64,712	6
Netherlands		900	17	52,503	7
Korea, South	KR	1,973	51	38,335	8
Norway		324	5	61,414	9
Finland	FI	247	6	44,866	10
Canada		1,714	37	46,705	12
United Kingdom	GB	2,857	66	43,269	13
Australia		1,192	25	48,460	15
Austria		462	9	52,398	17
Germany	DE	4,188	83	50,639	18
Israel		333	9	38,262	19
Ireland	IE	364	5	75,648	20
Estonia	EE	42	1	31,742	21
New Zealand		197	5	41,109	22
Iceland	IS	18	0	53,153	23
France	FR	2,876	67	42,850	24
Belgium	BE	544	11	47,840	25
Japan	JP	5,487	127	43,279	27
Lithuania		91	3	32,092	29
Slovenia	SI	72	2	34,868	31
Poland		1,102	38	29,026	32
Spain	ES	1,770	47	37,998	33
Czech Republic		385	11	36,327	35
Portugal	PT	326	10	31,673	37
Latvia		54	2	27,598	38
Chile		445	18	24,635	41
Italy	IT	2,387	61	39,427	42
Turkey	TR	2,140	81	29,505	44
Greece	GR	297	11	27,602	46
Hungary		275	10	28,108	47
Slovakia	SK	172	5	31,616	50
Mexico		2,358	129	18,258	54
Colombia		709	49	14,507	61



디지털 정부 순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는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열린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 국민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 등 6가지 항목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급변 조사에서 미국, 호주,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는 데이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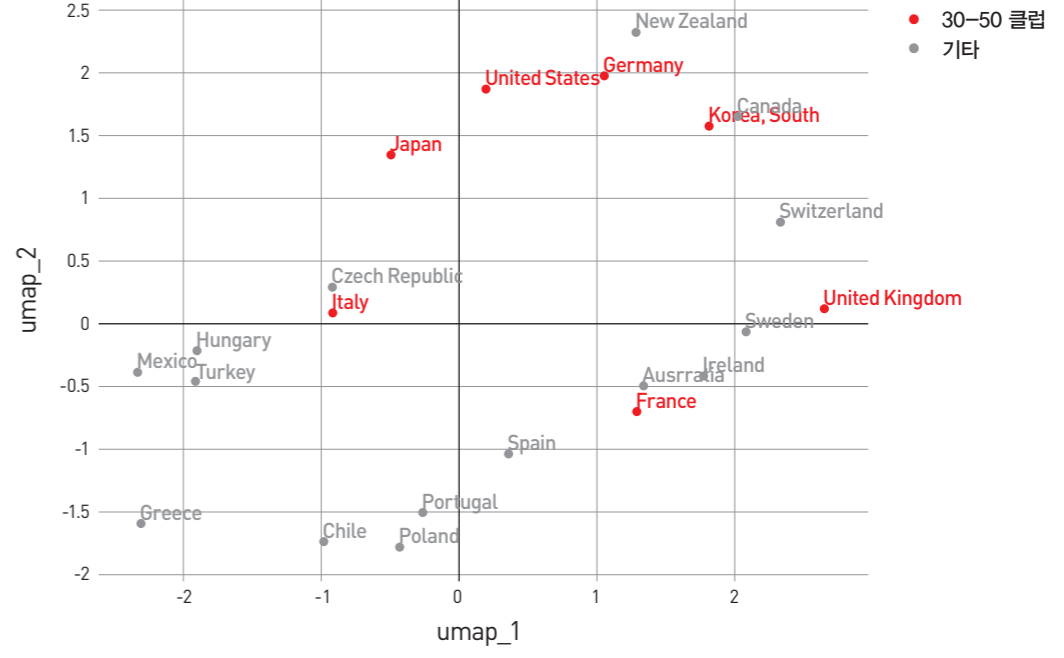
산업용 로봇 밀도

국제로봇연맹(IF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은 매년 '월드 로보틱스보고서'를 통해 매년 1만명당 로봇 댓수를 매년 국가별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제조업 로봇 밀도 2019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더불어 한국이 만명당 가장 많은 로봇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ountry	flags	gdp	population	gdp_per_capita	데이터경제_순위
United States		19,391	326	59,532	1
United Kingdom		2,857	66	43,269	2
Finland		247	6	44,866	3
Germany		4,188	83	50,639	4
Sweden		505	10	50,208	5
Korea, South		1,973	51	38,335	7
Denmark		296	6	51,364	8
Netherlands		900	17	52,503	9
Norway		324	5	61,414	10
France		2,876	67	42,850	11
Australia		1,192	25	48,460	12
Japan		5,487	127	43,279	13
Canada		1,714	37	46,705	14
Estonia		42	1	31,742	17
Switzerland		548	8	64,712	18
Israel		333	9	38,262	20
Ireland		364	5	75,648	21
Austria		462	9	52,398	22
New Zealand		197	5	41,109	23
Spain		1,770	47	37,998	24
Italy		2,387	61	39,427	25
Lithuania		91	3	32,092	26
Portugal		326	10	31,673	27
Belgium		544	11	47,840	29
Poland		1,102	38	29,026	31
Czech Republic		385	11	36,327	32
Slovakia		172	5	31,616	34
Iceland		18	0	53,153	35
Latvia		54	2	27,598	36
Slovenia		72	2	34,868	39
Hungary		275	10	28,108	41
Chile		445	18	24,635	47
Colombia		709	49	14,507	51
Mexico		2,358	129	18,258	55
Greece		297	11	27,602	61
Turkey		2,140	81	29,505	67

V 디지털 경쟁력과 지역균형 뉴딜

OECD 주요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며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포함하여 총 7개국에 불과하다.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인구, 디지털 경쟁력 순위지표를 넣어 데이터 과학 차원축소기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한국은 캐나다와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독일과 미국과도 멀지 않은 상대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경쟁력 보고서, IMD 세계 경쟁력 순위,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데이터 경제 순위, 산업용 로봇 밀도 등에서 OECD 상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별로 비교하여 봤을 때, 미국은 모든 평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국가이며 이태리, 멕시코, 터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강한 산업을 갖고 있는 선진강국이지만 디지털 역량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 독일, 프랑스가 대한민국과 미국에 이어 디지털 패권에 도전하는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시키고 있다.

country	flags	gdp	population	gdp_per_capita	WEF	IMD	AI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	로봇 순위
United States	US	19,391	326	59,532	1	1	1	1		9
Japan	JP	5,487	127	43,279	5	27	13	11	5	3
Germany	DE	4,188	83	50,639	6	18	4	13	26	4
France	FR	2,876	67	42,850	14	24	11	6	11	16
United Kingdom	GB	2,857	66	43,269	8	13	2	2	2	
Italy	IT	2,387	61	39,427	29	42	25	16	15	10
Mexico		2,358	129	18,258	48	54	55	18		
Turkey	TR	2,140	81	29,505	61	44	67	29		
Korea, South	KR	1,973	51	38,335	12	8	7	5	1	2
Spain	ES	1,770	47	37,998	22	33	24	14	7	13
Canada		1,714	37	46,705	13	12	14	7	6	18
Australia		1,192	25	48,460	15	15	12	9		
Poland		1,102	38	29,026	36	32	31	21		
Netherlands		900	17	52,503	3	7	9		21	12
Colombia		709	49	14,507	57	61	51		3	
Switzerland		548	8	64,712	4	6	18	4		19
Belgium	BE	544	11	47,840	21	25	29		25	11
Sweden	SE	505	10	50,208	7	4	5	8	33	5
Austria		462	9	52,398	20	17	22		20	14
Chile		445	18	24,635	32	41	47	20	24	
Czech Republic		385	11	36,327	31	35	32	10	22	
Ireland	IE	364	5	75,648	23	20	21	15	23	
Israel		333	9	38,262	19	19	20		8	
Portugal	PT	326	10	31,673	33	37	27	17	10	
Norway		324	5	61,414	16	9	10		13	
Greece	GR	297	11	27,602	59	46	61	23	29	
Denmark	DK	296	6	51,364	9	3	8		4	6
Hungary		275	10	28,108	46	47	41	26		
Finland	FI	247	6	44,866	10	10	3		28	
New Zealand		197	5	41,109	18	22	23	12	12	
Slovakia	SK	172	5	31,616	41	50	34			17
Lithuania		91	3	32,092	38	29	26		27	
Slovenia	SI	72	2	34,868	34	31	39		17	20
Latvia		54	2	27,598	40	38	36		19	
Estonia	EE	42	1	31,742	30	21	17		18	
Iceland	IS	18	0	53,153	25	23	35		32	

2020년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로 확장하는 발표가 있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총 6개 시도 지사가 핵심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관련하여 제주 미래혁신인재 10만 양성, 대전은 국내 최고의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오픈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실험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경기도

는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기치를 내걸고 공공 배달앱 구축을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발표했으며, 경상남도는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스마트 제조업 혁신을 물류 플랫폼과 함께 제안했다. 디지털이 갖고 있는 특유의 쓸림으로 인한 불평등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각 지역이 갖추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고려하여 지역을 차별화시키고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나름의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된다.

VI 마무리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경제사회 구조변화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은 OECD 국가를 다시 디지털 국가와 디지털 전환을 준비중인 국가로 양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물론이고 지역내총생산(GRDP)로 대표되는 경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불균형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 한국판 뉴딜에 이어 최근 발표된 지역균형 디지털 뉴딜 전략을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한다는 면에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치를 거래하는 새로운 소비

N차 신상을 만나다

'모바일 세대'로 통용되는 'MZ세대'가 중고거래에 빠졌다. 'N차 신상'은 몇 번 사용한 상품을 신상품이나 다름없게 사용한다는 뜻으로 2021년에 주목할 만한 트렌트로 떠올랐다. 새로운 세대가 중고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본다.

중고거래, 새롭게 인식되다

“입금했습니다. 운송비 포함 가격 맞나요?”

(…)

“실례지만 혹시 방탄 랩몬스터(RM)님 맞으세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주소랑 이름 보니 맞으신 것 같은데. 맞다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과 중고거래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가 올린 게시물이다. 이전에 몇 번이나 거래했던 상대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업로드 한 것이다. 글을 본 사람들이 놀란 것은 RM이 인지도가 높아진 이후에도 꾸준히 중고거래를 해온 점이다. 당시인 2018년경은 BTS가 세계적인 유명세를 누리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위 일화는 스타 개인의 검소함이 드러난 것에 더해 사회 전체적으로 바뀐 소비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이전의 중고거래는 상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조금 흠이 있더라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요자와의 연결이 어려워 전문점을 중계자로 이용해야 했는데 이런 경우 중계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도 적었고 기본적으로 값어치가 높은 물품이어야 거래가 가능했다. 포장만 뜯더라도 신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절반가량 떨어지는 매입 관행도 중고거래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쓰던 물건이 새 가치를 입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중고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훨씬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안전 거래 등의 다양한 안전장치도 거래 활성화를 도왔다. 이후 금융과 간편 인증 등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손쉽고 믿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졌다. 현재 당근마켓을 비롯해 다양한 스마트

폰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해 중고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가치소비의 부각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다. 시장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소비하는 가심비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중고 제품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N차 신상'이라는 용어는 새 제품이 아니면 가치가 낮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중고 제품을 새 것 같이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용어다. 내가 원하는 물건에 대한 소비로 신상품 구매와 같은 만족도를 얻는 이들이 중고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소비로 떠오르다

중고시장이 다양한 제품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면서 판매자들도 부담 없이 물건을 내놓고 있다. 이사, 정리 등을 통해서 필요없는 것으로 분류한 제품들을 판매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는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대량으로 내놓은 중고 물품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재미를 느낀다는 반응이다. 이런 판매 형태는 플리마켓 등으로 보편화된 것으로 스마트폰 앱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MZ세대의 관심사에도 부합한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정보를 접한 세대로 공유에 너그럽고 싫증은 빨리 내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쏘카 등 공유경제의 붐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이 사용하던 제품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한 것이다. 유행의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는데도 관심이 크다. 물건의 가치를 소유보다 경험에 두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접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도 이런 방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중고거래는 미래의 핵심 소비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신세대 소비자가 만들어가는 시장의 변화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주다운 무주’를 그리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국정방침으로 내세우며 민선 7기를 시작했던 무주군은 세계적인 으뜸관광과 건강가득 소득농업,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전반기는 4천억 예산시대를 열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군민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으뜸관광, 길을 내다!

민선 7기 전반기 무주군은 ‘관광’이 지역발전의 제1동력이라는데 집중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족호텔 등 노후시설 개선과 워터파크 등 부대시설 신축, 관광객 및 투숙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7회 만에 비교불가 낭만영화제로, 반딧불축제는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2019 전라북도 대표축제, 2020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만들었다. 무주만의 천혜 자연과 함께 전통, 역사,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어사길 2차 복원(신양담~백련사 입구)을 진행 중이며 조선왕조실록 봉안 행렬 및 봉안식 재현 행사(문체부 주관 2019 지방문화원 원전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공모 선정)를 관광 상품화시키기 위해 기록화 사업(영상물 제작)도 성대하게 치러냈다. 주민들은 “덕유산리조트의 변신이 옛 명성을 되살리는 장치가 되는 동시에 구천동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변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세계적인 으뜸관광, 길을 내다

건강가득 소득농업, 신 유통체계를 구축하다!

2018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공포한데 이어 2019년에는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백억 원을 조성했다.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손잡고 수매(매취)지원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품질관리사협회에 등록된 품질 관리사를 통해 수매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생오미자, 생천마 등 7개 전략품목의 수매, 저장, 판매 손실을 보상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왔다. 또 고령층이 대부분인 주민들과 소농들을 보듬기 위해 무풍과 안성 일부 마을에 수집장 총 56동을 완성시켰으며 현재 농산물 순회 수집을 진행 중이다. 이는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보장에 불을 지핀 농가소득증

대 정책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외 전국 농산물시장 13개 공판장을 판로로 확보한 것, 사과 품목 해외시장 확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도 소득농업 실현 기반이 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기금이며 수집장 등이 농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강가득 소득농업, 신 유통체계를 구축하다

함께하는 주민복지, 섬김을 말한다!

섬김 행정을 강조해온 민선 7기 무주군은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자립기반을 다지는데도 만전을 기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조례(1만 원 이·미용권 연간 총 12매 지원)를 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총 14,336명)이 관내 이·미용실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미용권을 지급(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했다. 관내 5개면 작은 목욕탕(기존 1,500원)과 예체문화관 수영장(기존 1,500원)도 70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장애인, 저소득층, 미취학아동 포함)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마을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말벗과 식사준비, 청소 등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2019년 134곳, 5억 3천여만 원 / 2020년 156곳, 6억 3천여만 원)했다. 어르신들은 “이·미용권이 주기적으로 나오니까 모아놨다가 파마도 하고 부담 없이 미용실 예를 다닐 수 있어 좋다”라고 알렸다.



건강가득 소득농업, 신 유통체계를 구축하다

지역맞춤 특색개발, 무주를 무주답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SOC 기반사업 등 추진에 주력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읍·면 소재지에 기초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복지시설을 더해 행정, 경제, 문화, 복지, 생활거점을 두루 갖춘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안성면은 해당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무주읍(읍내리와 당산리 일원, 2019~2023)과 무풍면(현내리 일원, 2018~2022), 설천면(소천리 일원, 2016~2020), 적상면(사천리 일원, 2018~2022)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다. 부남면은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대소리 일원, 2020~2024, 40억 원 확보)에도 선정돼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외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맑은 물 사업소’를 신설하고 안성정수장을 확장·이전했으며 구천정수장 증설을 위한 국·도비 21억여 원을 확보했다. 4개 지역(무주와 무풍, 설천, 안성) 공공하수처리구역 확장을 추진했으며 8백여 억 원을 투입해 소하천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은 “지역의 모든 시설물들이 마치 딱 맞는 옷처럼 무주와 조화롭고 주민들에게는 안식처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교육과 문화에 대한 열망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나

움직이는 자치행정, 군민을 행복하게

열린 군수실은 취임 직후부터(2018. 7. 25.~) 진행하고 있다. 매달 두 차례(둘째·넷째 수요일) 군청 민원실에서 군수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 군정에 관한 의견과 생활불편 그리고 건의 사항들을 듣는 것으로 황인홍 군수는 선거법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총 49회에 걸쳐 315건의 민원을 듣고 접수해 100%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무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한 학생에게 4년간 1인당 총 8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올해 첫 학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무주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지류 상품권을 처음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올 9월 말까지 총 295억여 원의 지류 및 카드 상품권을 제작·판매했으며 242억여 원이 환전·승인되는 성과를 올렸다. 주민들은 “10% 싸게 사니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관내에 다 풀리니 지역경제도 살지 무주사랑상품권이야말로 소비자와 상인들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효자 중의 효자”라고 입을 모았다.



움직이는 자치행정, 군민을 행복하게



VISION INTERVIEW

무주군, 7대 핵심비전으로 군민행복 일군다!

황인홍 무주군수

민선 7기 후반기의 막을 올린 무주군은 '7대 핵심비전'을 통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을 가시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분야별로 선별한 19건의 핵심비전 중 주민관심도와 추진가능성, 지역경제 파급성, 지역특수성, 생활밀접성에 기반을 두고 정책과 관광, 농업, 복지, 의료, 문화, 경제 등 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최종 7건을 핵심비전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Q 어느덧 민선 7기 후반이다. 7대 핵심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A 취임 단상에서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저의 책무이자 소명이다. 7대 핵심비전은 '무주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초석 마련, △꿈과 낭만, 멋과 문화가 있는 남대천 관광 명소화, △농촌협약 사업 유치와 푸드 플랜 완성,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과 평생학습도시 실현, △군립 요양병원 건립으로 의료서비스 강화, △매력 넘치는 무주시장 시설 현대화가 핵심이다.

Q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것은?

A 우리 군은 관광이 제동력이다. 하지만 동력으로서 역할이 가능해지려면 제대로 된 기반이 있어야 한다. 무주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오래도록

회자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무주덕유산리조트의 워터파크 조성을 구체화(2019년 관련 협약 체결)시키고 적상산성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체류형 관광콘텐츠 탄생과 적상산성, 안국사, 사고, 머루와인동굴, 상부담을 연결하는 적상산 일대 관광 명소화가 기존의 관광자원들과 어우러져 든든한 기반이 돼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

Q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A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태권도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전 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하고 졸업생에게는 태권도 사범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수련생들이 태권도성지 무주를 방문하게 하는 거다. 결국 태권도를 미래 전략 상품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더 나아가 우리 군 인구와 일자리 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국민여론조성과 정부·정치권 설득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1_ 무주군, 7대 핵심비전으로 국민행복 일군다 2_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위해 구상하다 3_ 건강가득 소득농업, 신 유통체계를 구축하다



Q 남대천을 부러워하는 외지인들이 많다. 소중한 자원인데 명소화 계획을 세우셨다고?

A 무주읍을 관통하는 남대천은 우리 군의 중요한 자원이자 젖줄이다. 우리하고 규모나 여건이 비슷한 어느 시·군에서도 남대천이 주는 경관과 혜택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내(川)를 찾기는 어렵다. 그동안도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관광 명소화'를 통해 제대로 된 자원으로 활용해볼 생각이다. 남대천을 빛과 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꿈과 낭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다. 제대로 연출이 된다면 관광객 유입, 체류시간 증대와 더불어 무주읍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도 충분히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농업인이 인구의 반이다. 농업소득증대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A 국비 최대 5백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사업(공모)을 유치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농촌사업을 추진해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또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 소비 간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푸드 플랜'을 완성시켜 지역순환 경제 토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활성화되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농가들의 안정적 일자리, 소득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군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 및 활력 도모가 충분해지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다.

Q 교육과 문화에 대한 열망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나?

A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통한 문화생활 활성화, 전 생애 학습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복합문화도서관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어른과 아이 모두 이용이 가능한 소통과 문화, 복지, 생활 혁신공간이자 포용의 공간이 될 것이다. 또 평생학습도시(5.20. 평생학습도시 선정_교육부)의 위상에 걸 맞는 전 생애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인데 지식과 능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동아리도 현재 운영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배우는 게 즐겁고 학습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Q 군립요양병원 건립에 쏠리는 관심도 큰데?

A 고령노인(65세 이상 노인인구 7천 9백여 명, 전체 인구의 약 33% 차지)과 추정 치매환자 수(1,041명, 무주군 전체 60세 이상 인구의 약 10.1% 차지) 등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 5천여 만 원(도비 55억 6천여만 원, 군비 80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130병상(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동부권 거점 요양병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완성이 되면 만성질환자나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



4. 세계적인 으뜸관광, 길을 내다

노인성 질환자 모두에게 안정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것은 물론, 환자 가족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광객 유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Q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심장이자 관광 상품, 시설현대화 계획은 무엇인가?

A 시설현대화로 매력 넘치는 무주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전통시장 특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토대인 동시에 남대천 관광 명소화 사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 시장 전체를 아름다운 남대천의 경관 조망과 빛 체험이 모두 가능하도록 개방감 있게 재구성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시켜 상인들과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시장이 1천만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A 7대 핵심비전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들 모두가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자 우리 군의 미래다. 군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일하는 현장을 보듬으며 후반기에도 '자랑스러운 무주, 활기찬 무주,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어 가는데 매진할 생각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수해 상황까지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침울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배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 태권도성지 무주를 항상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참여의 현주소는?

2020 대국민 인식조사

국민참여란?

국민이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결정·집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절차

국민참여제도의 종류

국가 차원



지역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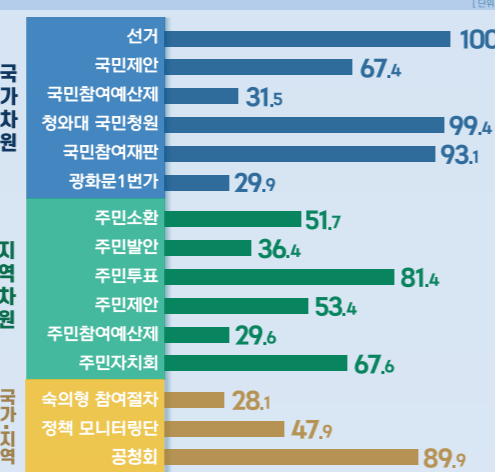
국가 지역 공통



인식 조사 결과

조사 기관	(주)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기간	2020년 8월 (1개월)
표 본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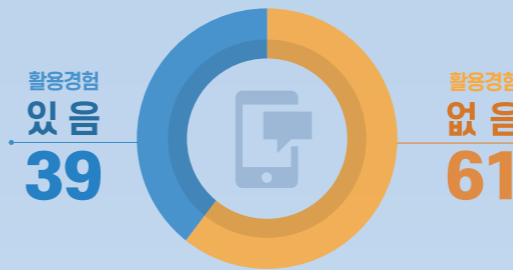


선거와 주민투표 등 국민의 선택이 바로 결정이 되는 국민참여제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참여재판, 공청회 등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음

공론회를 비롯한 숙의형 참여절차, 주민참여예산제,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이 정책을 제안·토론할 수 있는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함

SNS를 활용한 국민참여제도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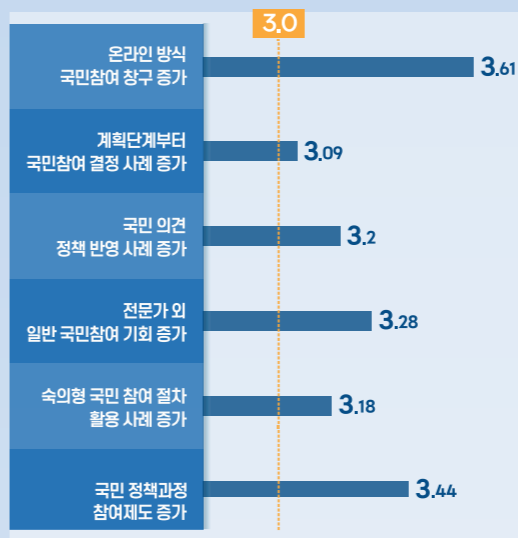


- 사회적으로 SNS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국민참여제도에 대해 SNS를 활용해 본 경험자는 전체의 약 40%
- 대부분은 SNS를 통해 정책 등에 대한 찬반의견표시를 하는 활동을 함

정부의 국민참여제도 변화 수준(최근 3년)

[단위: 5점 척도]

전반적으로 보통(3점)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



국민참여제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정부 정책 & 사업, 자신의 삶 &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과 밀접한 주민참여 기회 제공 활성화



공무원 인식 측면에서 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자료출처]

김지수·박재희(2020), 문재인정부의 국민참여제도 운영성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용문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33-769-9857, jisookim@krila.re.kr)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33-769-9853, jpark@krila.re.kr)



함께 이뤄내요

협업행정

협업행정이 왜 중요한가?

행정수요의 복잡화, 다양화



최근 행정수요가 복잡한 사회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여
단독 주체로 감당 불가능

공공, 민간분야 주체 간 업무협력



협업행정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역할 수행



협업행정은 다양한 주체들 간 업무협력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한계를 극복하는 실질적 대안

협업행정이란?

협업행정 개념

Who?
복수의 주체가

Why?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How?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What?
특정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위



과거 공공분야의 행위 및 결과

현재

민관협력, 공공분야의
민간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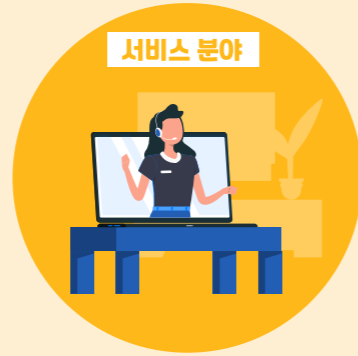
협업행정

협업행정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고려사항 및 운영방법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를 고려하여, 협업행정의 범위에 대한 탄력적 이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목표, 가치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외부고객 및 내부고객 모두를 고려한 협업행정의 중요성 인지



과학기술의 적극 도입으로 협업행정의 실현 및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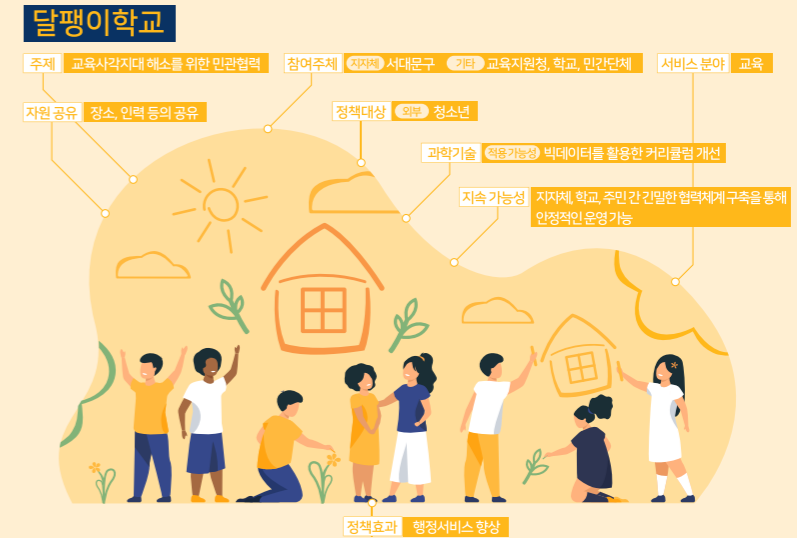
협업의 주체들 간 칸막이 제거 및 자원 공유를 통한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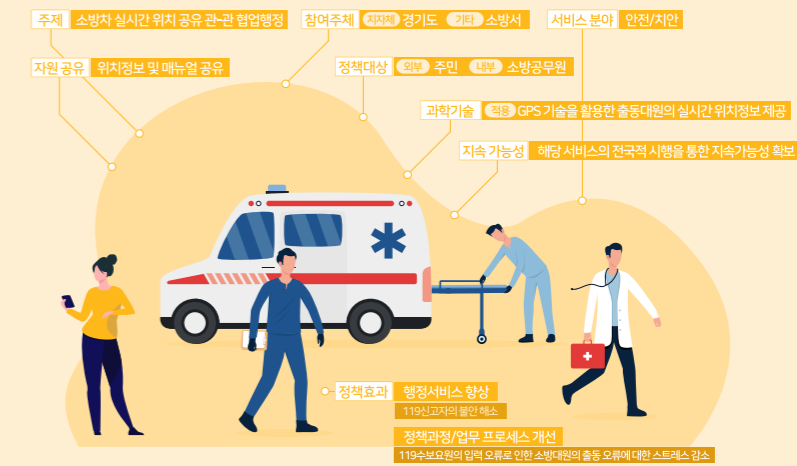
우수 협업행정 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우수사례는?

천천히, 자유롭게 만나는 학교밖 배움터



소방차 출동정보 119신고자와 실시간 공유·협업



[자료출처]

이재용(2020), 지방자치단체 협업행정 유형분석 및 협업모델 신규 발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용문의]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33-769-9851, jlee@krila.re.kr)

#협업행정 #협업 #소통 #참여
#개방성 #유연성 #상호작용
#협업행정_고려사항
#협업행정_운영방법



제3회 관·연·학 인재개발 연구협의회(웨비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관·연·학 인재개발 연구협의회'는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국가인재원 과천분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정부혁신과 공공HRD의 새로운 진화」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관·연·학 인재개발 연구협의회는 공공HRD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기관 간 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연구기관·학계 등 총 9개 기관의 연구협의회로, 연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 일시 2020년 8월 28일
- 📍 장소 국가인재원 과천분원 보람관 1층 대강당
- 👤 주최 한국정보화진흥원, 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운동인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원장 권한대행은 9월 22일 화요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운동인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지명을 받은 김 원장 권한대행은 사회적경제기업상품물 e-store36.5+ (www.sepp.or.kr)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다음 참여자로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명했다. 김현호 원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일시 2020년 9월 22일
-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제6차 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9월 23일 수요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제6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은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제로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 미래비전 수행설계'라는 주제로 세부전략과제 및 과제별 방향 설정, 자문위원 분과구성 등 구체적인 집필방식 등을 확정하였으며 2040년 미래비전 전략수립을 위한 세부 설계가 논의되었다.

- 🕒 일시 : 2020년 9월 23일
-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 사업관리센터 2층 대회의실
-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정책제안 공모전 중간보고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9월 25일 금요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정책제안 공모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에는 공모전에 선발된 9명과 행정안전부 김경민(정부혁신전략추진단 과장), 안진희(정부혁신전략추진단 사무관)을 포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원장권한대행), 주재복(자치분권제도실장), 박승규(지역포용발전실장)이 참석해 자치 분권 및 지역사회 혁신과 관련된 주제를 질의 응답 형식으로 과제에 대한 추후 방향성을 논의했다.

- 🕒 일시 2020년 9월 25일
-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층 대회의실
-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3차 KRILA 자치포럼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제3차 KRILA 자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강은경 대표 이사가 '생활 속의 예술과 음악 - 서울시향의 새로운 일상 -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 일시 2020년 10월 5일
-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
-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주발전포럼 간담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0월 12일 월요일, 원주 혁신도시 내 '해원' 연회실에서 원주발전포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시장 및 유관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살기 좋은 원주 만들기'에 관한 발표에 이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상생발전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 강화 방안으로 원주발전포럼 운영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 🕒 일시 : 2020년 10월 12일
- 📍 장소 : 원주 혁신도시 '해원' 연회실
-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 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회의실에서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각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최종보고와 자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는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경수(국회예산정책처), 김귀영(서울연구원), 김대건(강원대학교), 김태영(서울시립대학교), 남궁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변미리(서울연구원), 여관현(안양대학교),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환(경기연구원),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 허석균(중앙대학교)이다.

- 🕒 **일시** 2020년 10월 12일~18일
-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회의실
-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차 KRILA 자치포럼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제4차 KRILA 자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윤인숙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이 '공감대화법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의 기술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 **일시** 2020년 11월 2일
-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
-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보고서



1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연구위원 | 최인수 연구위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규정하고, 정책목표, 사업주체, 범위와 내용, 사업의 주체와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된 주제별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대학타운형, 역사문화형, 건축경관형, 지역상권형, 여성친화형, 농촌형, 도시재생형 등 7가지 모델에 추가하여 8번째 모델인 공공생활 집약형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한다.

이상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거점 읍면동을 지정하고,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시설을 도시재생사업구역에 집약(핵심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거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어울림플랫폼센터 등을 신축하여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 삼았다. 또한, 주변 읍면동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소거점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기초적인 행정서비스에 생활서비스를 포괄하여 제공하고 거점 읍면동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한다. 기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리모

델링하여 읍면동 거점(중심지역)의 찾아가는 서비스 정류장(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읍면동 대표적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와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공공생활집약형 도시재생 모델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하여 첫째, 주변지역 읍면동의 유기적 순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 읍면동에서 공공생활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주민의 편리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거점 읍면동과 주변 읍면동간 순환 버스 운행, 스쿨버스나 어린이집 버스, 공공기관의 출퇴근용 버스 등을 활용한다. 둘째, 읍면동의 행정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선행정체계의 유연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행정간의 만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읍면동의 조직구성을 위하여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읍면동장 주민공모제 등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에 입각한 읍면동 권한 강화를 위하여 공공생활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위하여 시군구 기능을 대폭적으로 읍면동에 이관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위하여 민간(청년) 동장 채용, 시간선택제·임기제 등을 통한 주민 채용, 행정업무 중 상당부분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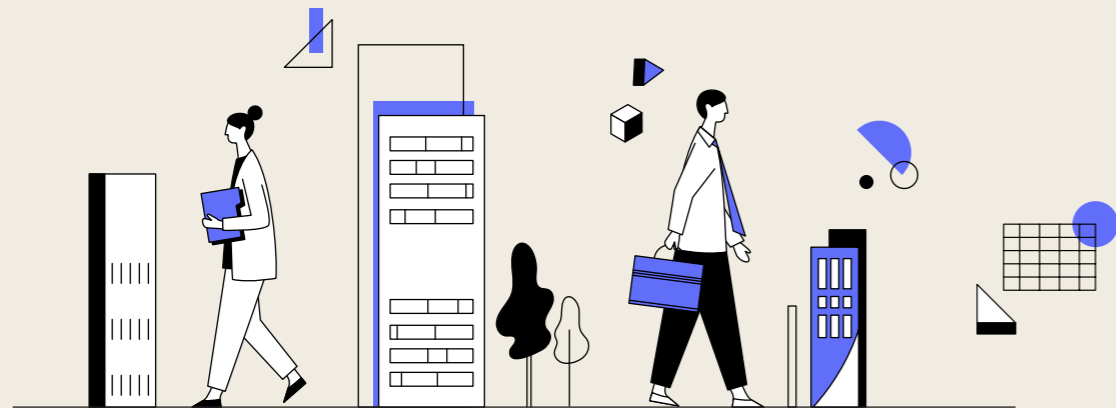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주 부연구위원 | 윤태섭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내용과 그것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현행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한계점을 분석 한 후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간 관계와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한계점은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논의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의 상향을 통한 지방세 확충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머지 향후 지방세로 대표되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로 대표되는 이전수입과의 역학관계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과 재원보전 기능의 효과적 수행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이양되는 지방세만큼 국고보조금을 축소할 때 발생할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재정형평화기금(가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기금의 재원은 기존 지방소비세의 소비지수 기준 5%와 취득세 보전분에서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분 50%와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제외 금액, 지방소비세 추가이양분 11.9조원, 주세 3.3조원을 합하여 약 20조 8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배분방식은 현재의 지자체 자주재원 비중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역재정형평화기금(가칭)을 배분한다.



3

지자체간 상호협력촉진을 위한 재정협력제도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성만 부연구위원 | 조기현 선임연구위원

연구의 목적은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재정협력제도방안 모색하는데 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전략에 1)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2)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과제와 연계된 내용은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권역별 공동발전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생활 관련 기능의 효율화 및 행정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제고한 제도적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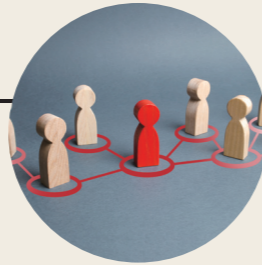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 국내의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2) 협력제도를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 3) 국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자치단체 간 협력운영제도 조사, 4) 한국의 위례신도시의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연구에서는 단기와

중·장기의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기방안으로는 지자체 간 단일사업 및 주요 사무를 대상으로 한 협력제도 방안을 제시, 현행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에 기반한 재정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및 지역발전상생기금을 연계하는 활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으로 「지방자치법」의 지방 간 협력체계에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장기 방안으로 「지역개발 및 지방 간 협력체계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하여, 현행 중앙 주도적인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벗어나 중앙-지방 간의 광역연합체를 기초로 한 지역중합계획의 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의 시범적 운영을 통한 광역행정수요의 대응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협력을 위해서는 향후 공동세 기반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선임연구위원 | 고경훈 부연구위원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조직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 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현행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조직관리제도를 분석·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책임성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유도나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임성의 경우에는 일본과 프랑스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

도에 대한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인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를행정기관의 설치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부단체장의 정수, 직급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역시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축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한 후 자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적인 인력운동을 위하여 기준인건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자율화 될 경우 사후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연구위원 | 김도형 연구위원



소득 증대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가치의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삶의 질 가치에 대한 중요성 증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계획에 대한 중요성 역시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장래 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예측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 발생분에 대한 문제점 외에 국내 발생분에 대한 노력에 대한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반면, 환경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 대기오염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정치·경제·사회·문화·보건 등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의 질 악화로 인한 변화 흐름, 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방향은 제시해 이루어져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원인 파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설정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기존연구에 대한 정리를 통한 함의를 선행연구, 수범사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기존 대기오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한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파악하였으며, 미세먼지의 오염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를 시계열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구분하여 발생 및 원인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미세먼지의 지역간 연계성 및 영향이 존재하는 근거를 광역시도와 광역시도를 연계한 권역별 자료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계절성에 근거한 미세먼지의 발생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세먼지의 발생은 대기의 흐름으로 인해 상호 연계되는 지역의 도출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간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방법을 국내에 적용하여 미세먼지의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져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요인 외에 국외 요인에 의해 주도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 요인, 환경 요인, 국외 요인 등에 대한 영향을 모형에 기반한 실증 연구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운영의 근거와 현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보다 정밀한 방법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 도출에 필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 김정숙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현행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기존의 사후적 접근 방식과 달리 사전적 접근방식인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모색하였다. 특히,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실행을 위한 평가체계를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위한 평가체계는 일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성요소를 준용하여 평가목적과 평가체제 및 운영체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계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근거로 제시된 요소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재한 요소는 신설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우선, 평가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신설하였다. 평가의 목적은 해당평가의 실시 이유와 효과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 영향평가의 목적으로 개정법률에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저해요소와 시도의 조례·규칙의 제·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 저해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평가체제에서는 평가대상과 평가지표는 제시되

고 있으나, 평가방법은 대통령령과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서 시안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개정 법률을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메타평가 방식을 준용하여 각 부처의 1차 검토를 거쳐서 2차적으로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다만, 기존의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평가방식을 준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운영체제에서는 평가주체와 근거법령은 명시하고 있으나, 평가절차는 대통령령과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이 역시 시안을 수립하였다.

평가절차는 메타평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체의 흐름도를 매뉴얼화하고, 이를 각 부처에 충분히 설명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제도의 정비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관련 법률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기존의 유사제도 중에서 행정안전부 법령안 심사와 재정부담심의 등은 기능의 중복이 발생되므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의 내부적 평가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 논문모집



「지방행정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는 여러 내외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로 2007년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그간 지방자치, 지방행정분야의 독보적인 저명 학술지로 자리 매김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지방행정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선도를 위해 더욱 검허히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논문주제** :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세, 지역발전 분야 등 지방행정관련 모든 분야

▶ **원고분량** : A4 25매 이내

▶ **원고마감 및 발간일정**

구분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
원고마감일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발간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마감일 이후에도 수시 접수합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JAMS) 투고 <https://krila.jams.or.kr>

▶ **문의처** : Tel_ 033-769-9825 | E-mail_ local@krila.re.kr

▶ **기고논문은 「지방행정연구」 발간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합니다.**

▶ **심사료 및 게재료는 없습니다.**

※ 지난 논문검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지방행정연구” 코너 (<http://www.krila.re.kr/?code=research&subp=0201>) 를 참고하여 주세요.



OCTOBER 2020 Vol.33
「한국판 뉴딜정책」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